

관동대지진 학살문제의

인식론

‘불편한 공존’의 균열과 ‘두 가지 국제화’의 행방

이경미

1. 들어가며: 100주년을 보내며

2023년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사건의 현장이 된 일본에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2023년에 도쿄도 홈페이지에 신설된 <관동대진재 100년>에서는 “수많은 재해를 극복해 온 도쿄. 대비하자, 내일의 방재”라는 표어가 제시되었다.¹ 1960년에 ‘방재의 날’이 지정된 이래의 관점이 여전히 관철되

이경미(李慶美)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근대 한일 간의 정치사상사를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제국식민지기 민족담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평화, 종교, 철학, 생(生) 등 주제별로 주제형성 담론의 진개를 살피고 있다. 공저로 『이용희의 정치학과 정치사상』(2023), 『근대 동아시아 평화사상: 질서·저항·공동체와 평화』(2021), 논문으로 「하타노 세이이치의 ‘생’의 종교 철학: ‘자멸하는 주체’에서 ‘상징의 비유’로서의 천황까지」(2023), 「‘조천’에 나타난 나철의 근대적 종교관: ‘성스러운 정치’를 향하여」(2022), 「‘문명화’와 ‘동화’ 사이에서 주체되기: 근대 동아시아에서 르봉 수용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2021), 「3·1운동과 제국일본의 위기: 아베 미쓰이에의 전환론과 식민지조선의 합법적 정치공간」(2020) 등이 있다.

1 東京都総務局総合防災部防災管理課, 「関東大震災100年」, <https://www.bousai.metro.tokyo.lg.jp/>(최

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이와 더불어 ‘부흥’이라는 구호 역시 여전히 진재 스토리를 장식하는 대표적 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³ ‘부흥’이 됐든 ‘방재’가 됐든 그 자체로서는 논의의 가치가 있지만, 그 스토리 속에 ‘학살’이 들어갈 곳이 없다면 ‘은폐의 역사’를 답습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⁴ 한편 한국에서 관동대지진을 이야기할 경우 ‘학살’이 절대적 관심사로 회자된다.⁵ 이처럼 학살을 ‘이야기하는/하지 않는’ 사이의 간격은 100주년을 보내면서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로 보인다.

본론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관동학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건으로부터 40년이 지난 1963년을 전후해서였다. 그것은 전후 재일 조선인 연구자와 일본인 연구자 사이에서 ‘불편한 공존’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공존은 ‘균열’되었고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의 ‘국제화’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한일 간에 학술교류가 이루어져 그동안 일본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들이 한국

중 검색일: 2023. 12. 5).

- 2 1960년 6월 17일 기사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은 각의양해를 통해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1982년의 개정을 통해 ‘방재주간’이 추가되었다. 2023년 8월에 경시청, 산케이신문, 닛폰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캠페인 ‘관동대지진 100년, 대비하다’는 그러한 관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関東大震災100年 備える) 日頃から防災意識持つことが重要 池田克史副総監インタビュー」, 『産経新聞』, 2023년 8월 7일; 「(関東大震災100年 備える) 幅広く高度化する災害対応能力 田浦善之災害対策課長に聞く」, 『産経新聞』, 2023년 8월 24일; 「(関東大震災100年 備える) 組織一丸で有事に対応 清水邦彦特殊救助隊長に聞く」, 『産経新聞』, 2023년 8월 31일.
- 3 특히 이 관점에서는 내무대신 고도 신페이(後藤新平)가 총재로 이끈 ‘제도부흥원’(帝都復興院)의 역할을 한신·아와지대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이후의 진재 경험에 겹쳐서 본다. 「(解説)関東大震災から70年 現代に生かせ復興の教訓 首都計画検討の時」, 『読売新聞』 1993년 11월 25일; 「(正論)帝都復興, 後藤はどう行動したか 拓殖大学顧問 渡辺利夫」, 『産経新聞』, 2023년 9월 1일.
- 4 야마다 쇼지(山田昭次)가 주의를 환기하듯이 2017년 이레 도쿄도는 스미다구 요코야미초 공원(墨田区横網町公園)에서 매년 열리는 추도집회에 대한 추도문의 송부를 정지시키고 있다. 요코야미초 공원에는 1973년에 ‘관동대지진 5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행사 실행위원회’에 의해 추도비가 건립되었다. 이레 도쿄도에서도 연례행사에 추도문을 송부해 왔으나 2017년 민간 우익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자유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 고가 도시아키(古賀俊昭)의 문제제기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정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부정’의 움직임은 2012년 요코하마 시의회를 무대로 일어난 사회과 부독본 개정 사건 등 적잖이 등장한다.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虐殺事件とこれをめぐる現在の思想現況」, 『(季刊)戦争責任研究』 90号, 2018, 8~9쪽.
- 5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기획된 행사의 예로, 일본사학회 주최, ‘관동대지진 100년: 민중폭력과 역사적 기억’ 자료집, 2023년 8월 18일; 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심포지엄,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기억』 자료집, 2023년 8월 30일.

학계에 소개되었으며,⁶ 일본학계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새로 발굴되기도 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문제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차지할 위치에 대해 우리는 그리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은폐의 역사’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60년의 연구성과마저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대응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 흔들림 없었던 대전제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 비판의식을 갖는 자세는 물론 중요하지만, 상황을 진정 호전시키려고 한다면 좀더 자기 성찰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이다.

은폐와 부정의 힘은 왜 그토록 막강할까. 학살연구의 노력은 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100주년을 보내면서도 관동학살은 여전히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에게 ‘무관심’에 가까운 문제다. 그 배경에는 물론 은폐와 부정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동안 학살문제를 다루었던 방식, 그 ‘인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100주년을 보내면서 한 번쯤 자문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살연구가 더 큰 ‘공감’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인식론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관동학살에 관한 연구사에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동안 연구사에 관한 정리는 여러 번 시도되었

6 대표적으로 다음 세 권의 번역서를 들 수 있다. 강덕상, 홍진희 옮김, 『조선인의 죽음』, 동쪽나라, 1995; 강덕상, 김동수·박수철 옮김,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005; 야마다 쇼지, 이진희 옮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7 예컨대 조선 총독부의 대응을 다룬 연구로, 노주은,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2007; 이형식, 「중간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東洋史學研究』 113집, 2010; 조경희,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 ‘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8호, 2017. 해외 한인 사회의 반응을 다룬 연구로, 장세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史林』 46호, 2013; 홍선표,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歐美 한인세력의 대응」, 『동북아 역사논총』 43호, 2013. 조선사회 내 세력의 대응을 다룬 연구로, 성주현, 「1923년 관동대지진과 국내의 구제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호, 2014.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조사 자료에 대한 연구로 김도형, 「관동대지진 한국인 피살자 명부 자료의 분석」, 『북악사론』 12호, 2020.

으며 총체적인 안내는 이를 참고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⁸ 다만 본고에서는 망라적 정리보다는 첫째로 논쟁사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학살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있어 온 ‘유언(流言)의 발생근원’과 ‘피살자의 성격’ 논쟁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이때 필자의 관심은 논자들이 ‘어떻게 주장했는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는지’까지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사 정리에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누락된 문맥’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이 문맥이 포착되어야만 학살연구 안에 있었던 공존과 균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국제화의 흐름이 이해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어떠한 인식론적 차이를 갖는지도 명확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 해당 논쟁에 대한 통설적 이해를 개관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해당 논쟁을 1960~1970년대 역사적 맥락과 함께 재조명할 것이다. 이때 논쟁의 골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인물로 강덕상의 언설에 주목할 것이다. 그의 입장 변화를 이해하는 작업은 기존의 연구사 정리에서 누락되었던 문맥을 들춰낼 뿐만 아니라 학살연구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발판이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의 분석을 토대로 2000년대 이후 학살연구에 나타난 두 가지 국제화의 방향—민족해방투쟁과 보편적 연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로써 현재 무관심의 영역에 방치된 일본의 대중들이 ‘조선인 학살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8 그동안 연구사를 다룬 논문으로는 이하를 참조. 高柳俊男, 「朝鮮人虐殺についての研究と文献」, 『季刊三千里』 36号, 1983; 松尾章一, 「関東大震災史研究の成果と課題」, 松尾章一 監修, 平形千恵子・大竹米子 編, 『関東大震災 政府陸海軍関係史料 I 卷: 政府・厳戒令関係史料』, 日本経済評論社, 2003(초판은 1996); 坂本昇, 「関東大震災史研究運動の成果と展望」, 関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 編,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日本経済評論社, 2004; 田中正敬, 「近年の関東大震災史研究の動向と課題: 現在までの十年間を対象に」,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노주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학림』 29집, 2008; 노주은,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研究の二つの流れについて: アカデミックなアプローチと運動的アプローチ」, 田中正敬・専修大学関東大震災史研究会 編, 『地域に学ぶ関東大震災: 千葉県における朝鮮人虐殺 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 日本経済評論社, 2012; 다나카 마사타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호, 2015; 西村直登,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る朝鮮人の生と記憶」, 同志社大学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20.

2. 학살을 둘러싼 쟁점

1) 유언의 발생근원: 책임의 소재

주지하다시피 학살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당시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우물 에 독을 탔다, 폭탄을 터뜨렸다’는 등의 폭동설이 있었다.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유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묻는 것이 발생근원 논쟁의 시발점인데, 이 질문에는 말 그대로 ‘근원’을 찾는 의미뿐만 아니라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의도가 포함되었다.

발생근원 논쟁은 학살연구가 본격화된 1963년을 기점으로 일어났다. 1963년은 40주년을 맞이한 해로 재일조선인 역사학자 강덕상과 금병동의 편저로 『현대사자료집6 관동대진재와 조선인』이 발간된 것도 이 해였다.⁹ 같은 해 강덕상은 세 개의 저널 — 『역사학연구』(7월), 『노동운동사연구』(7월), 『역사평론』(9월) — 에 관련 논문을 잇달아 발표했다.¹⁰ 한편 이 해 9월에는 『사상』에도 일본인 역사학자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允)의 학살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다.¹¹ 마쓰오는 이듬해 2월에 월간지 『미스즈』에 강덕상과 금병동의 자료집에 대한 서평을 쓰기도 했으며¹² 이에 강덕상과 금병동이 답변을 보내면서 양자 간에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¹³ 하지만 이때의 공방은 사료비판적 차원을 넘지 않았다. 양자의 관계가 발생근원 논쟁으로 불거진 것은 같은 해 8월 『조선연구』에 발표된 마쓰오의 글을 통해서였다.¹⁴

발생근원에 대한 마쓰오의 입장은 통상 ‘자연발생설’ 혹은 ‘민중발생설’

9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

10 姜徳相, 「關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歴史学研究』 278号, 1963; 姜徳相, 「大震災下の朝鮮人被害者数の調査」, 『労働運動史研究』 37号, 1963; 姜徳相, 「つくりだされた流言: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について』」, 『歴史評論』 157号, 1963.

11 松尾尊允,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上)」, 『思想』 471号, 1963. 하편은 서평과 같은 1964년 2월에 게재되었다. 松尾尊允,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下)」, 『思想』 476号, 1964.

12 松尾尊允, 「姜徳相·琴秉洞『現代史資料6關東大震災と朝鮮人』1963年への書評」, 『みすず』 6卷 2号(通卷57号), 1964.

13 姜徳相·琴秉洞, 「松尾尊允氏『關東大震災と朝鮮人』書評についての若干の感想」, 『みすず』 6卷 4号(通卷 59号), 1964.

14 松尾尊允,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2, 3の問題」, 『朝鮮研究』 33号, 1964.

이라 불리며 강덕상의 입장은 ‘관헌날조설’ 혹은 ‘관헌발생설’이라 불린다. 논자에 따라 호칭에 차이는 있지만 발생근원을 ‘관헌’으로 보는 강덕상과 ‘민중’으로 보는 마쓰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었다는 이해는 공통된다. 물론 양자의 대립은 상대적 선택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벌어진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전전에 이루어진 ‘은폐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학살의 ‘책임’을 묻는 문제의식 자체가 애초 ‘은폐’의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학살이 벌어진 당시 사건의 중대성을 깨달은 일본정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폭동 및 학살의 사실 여부와 규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의 진상으로 선전하도록”을 통달했다.¹⁵

조선인이 폭행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사례는 다소 있지만 지금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조선인은 모두 아주 온순하고 선량하다. 조선인 중 혼란 시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 소수 있지만 일본인도 동일한 박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 있다. 모두 혼란 시에 발생한 일로 조선인에 대해 일부러 크게 박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¹⁶ [밑줄 강조는 인용자]

이것이 1923년 9월 5일에 임시 진재구호사무국 경비부에서 극비 취급으로 마련한 「조선문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의 일부다. 지진은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일어났으며 유언의 확산과 함께 학살이 이루어진 것은 당일 밤부터로 추정된다. 늦어도 2일에는 유언과 학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같은 날 오후 6시에 계엄령이 공포되었다. 물론 계엄령 하에서도 학살은 계속되었다. 위의 「협정」은 그러한 상황을 ‘수습’해야 한

15 警備部, 「(参考)朝鮮問題に関する協定(極秘)」,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79쪽.

16 警備部, 「(参考)朝鮮問題に関する協定(極秘)」,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80쪽.

다는 의지가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된 시점을 보여 준다. 왜 5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도쿄역 스테이션 호텔에 대피 중이었던 각국 요인(대사, 공사, 외교관)들 사이에서 학살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위의 「협정」에서는 “각 방면의 관현”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으로 ‘사실의 진상’을 알리도록 당부하고 있었다.¹⁸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인용문에서 밑줄을 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인의 폭동(유언)은 ‘적지만 있었던 사실’이 되고 학살은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한 사실’이 되었다. 요컨대 이 「협정」을 통해 ‘폭동=유언’을 일부 사실로 ‘공인’하고 ‘학살’을 소수의 사실로 ‘절하’시키는 공식 입장이 정립된 것이다.

이것이 은폐의 첫 조작이었다면 두 번째 조작은 ‘자경단’을 둘러싼 대책에서 수행되었다. 「협정」이 마련된 9월 5일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権兵衛)는 다음과 같은 유고(諭告)를 발표했다.

일부 불령선인의 망동이 있다고 조선인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 민중 스스로가 함부로 조선인에게 박해를 가하는 일은 일선동화라는 근본방침에 배반할 뿐만 아니라 각국에 보도되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¹⁹

군대와 경찰의 호명에 힘입어 각지에 결성된 자경단이 조선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자 이를 말리는 유고를 낸 것이다. ‘일선동화’나 ‘각국에 보도된다’는 말에 잘 나타나듯이 정부가 자경단을 말린 이유는 생명

17 江口渙, 「大震災とファシズム××の失敗」, 『戦旗』 15호, 1930, 133쪽.

18 警備部, 「〈参考〉朝鮮問題に関する協定(極秘)」,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79쪽.

19 内閣総理大臣山本権兵衛, 「震災に際し国民自重に関する件」,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74쪽.

보호보다 제국으로서의 뒷감당을 우려한 결과였다. 이러한 성격의 공문은 9월 6일 관동계엄사령부에서 낸 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렇게 해서 폭동=유언은 소수의 ‘불령선인’의 소행으로 규정되고, 학살은 이에 선동된 자경단의 만행으로 규정되었다. 그마저도 소수의 사실로 절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경찰, 군대는 그러한 만행을 말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조선인’을 ‘보호’하는 존재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증명된 바 정부, 경찰, 군대는 유언의 발생 및 확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5일은 학살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부의 방침이 수정된 시점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은 폭동을 일부 사실로 만드는 한편 학살을 이에 격분한 자경단의 소행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로써 사건의 책임을 ‘민중’(자경단)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관현’(정부, 군대, 경찰)의 책임을 은폐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언의 ‘발생근원’에 대한 물음은 이와 같은 역사를 뚫고 나온 질문이었다. 전전에 학살의 책임이 ‘민중’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전후에 추궁의 화살이 ‘관현’으로 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민중’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마쓰오의 반론이 있기는 했지만, 양자의 대립은 결코 절대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학살의 배경에 있던 ‘제국식민주의’를 비판한다는 목적에서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자료적 한계에 있지만, 만약에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다고 해도 상대적인 무게가 달라질 뿐 어느 한쪽이 책임에서 풀려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유명무실한 논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²¹ 필자는 여전히 이 논쟁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하

20 즉 “모든 조선인이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한두 악인의 음모 때문에 선동되는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말라”는 식으로 자중이 당부되었다. 關東嚴戒司令部, 「九月六日嚴戒司令部注意」,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74쪽.

21 논쟁 자체는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민중의 책임’이라고 외친 야마다 쇼지의 명제 속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03.

기로 하겠다.

2) 피살자의 성격: 계급과 민족

학살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으로 '피살자'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있다. 이는 발생근원 논쟁에서 '관헌'의 책임을 강조했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으로 통상 '3대 테러사건'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해된다. 3대 테러사건이란 가메이도 사건(亀戸事件), 아마카스 사건(甘粕事件), 조선인 학살사건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가메이도 사건은 9월 4~5일에 걸쳐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澤計七) 등 난카쓰노동회(南葛労働会) 멤버 10명이 가메이도 경찰서에서 살해된 사건을 말하며, 아마카스 사건은 16일에 일본의 저명한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栄)와 내연의 처 및 조카 3명이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를 비롯한 헌병들에게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특히 오스기의 사건은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어 관헌의 소행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당시에도 크게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은 전후 학살연구가 본격화되었을 때도 이어져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에 대한 학살을 함께 논하는 관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전후 이러한 관점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마이 세이치(今井清一)와 그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 등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역사학에 종사한 일본인 연구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관점을 '3대 테러사관'이라 부르며 비판을 제기한 것이 강덕상이었다. 그는 세 사건을 동렬에 놓고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건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강덕상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래의 구절이다.

앞의 두 사건이 관헌에 의한 관헌의 완전한 권력 범죄이며 자민족 내의 계급문제인 반면, 조선인 사건은 일본 관민일체의 범죄이며 민중이 동원되어 직접 학살에 가담한 민족적 범죄이며 국제문제다. 이 차이를 준별하지 않을 수는 없다.²²

이는 1975년에 출판된 강덕상의 대표작 『관동대지진』의 한 구절이다. 앞서 발생근원 논쟁에서는 ‘관헌’의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위에서는 조선인 학살이 관헌뿐만 아니라 ‘민중’도 참여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관헌’에 의해서 살해된 앞 두 사건과 달리 ‘관민일체’로 이루어진 학살이었다는 것이 비판적이지 사건 성격의 ‘준별’하는 기준이었던 것이다. 강덕상이 양 논쟁 사이에 보인 논점의 변화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건의 성격을 구분짓는 그의 언설이 ‘계급’과 ‘민족’이라는 구도를 도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두자. 즉 관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가메이도, 아마카스)은 ‘계급문제’인 반면 관민일체로 이루어진 사건(조선인 학살)은 ‘민족문제’라는 구도다.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사건이 ‘관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 다시 말해 ‘민중’이 참여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강덕상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²³ 이를 통해 그는 ‘계급’(일본인 사회주의자)으로부터 구분된 ‘민족’(조선인)을 도출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구분의 갈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의 대상이 된 ‘피살자’는 조선인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인, 오키나와인, 지방 출신자,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부락민 등 피해의 범위는 다양했다.²⁴ 이

22 姜徳相, 『(新装版)関東大震災』, 新幹社, 2020, 208쪽.

23 하지만 다나카 마사타카가 지적하듯이 나라시노(習志野) 수용소의 경우 ‘사회주의’에 준한 선별이 ‘조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며 이 경우의 학살은 ‘관헌’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관헌에 의한 사건을 ‘학살’로 볼 것인지 ‘살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덕상은 ‘살해’와 ‘학살’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그 기준은 명확치 않지만 ‘조선민족’을 겨냥한 사건만을 ‘학살’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나라시노의 사례와 가메이도·아마카스의 사례는 사건의 성격은 같지만 학살/살해로 나누어지는 어긋남이 발생한다. 한편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민족’에 대한 사건을 의미하지만 조선인 외의 소수민족(예컨대 중국인)도 포함하게 된다. 이와 또다른 입장으로 소나 랑의 경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개념으로 학살된 ‘조선인’의 존재를 이해하면서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사건은 ‘자유인’(free men/women) 혹은 ‘시민’(citizen) 사이에서 이루어진 ‘살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나카 마사타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108~109쪽; Sonia Rya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Massacre of Koreans in 1923: Notes on Japan’s Modern National Sovereignty,” *Anthropological Quarterly* 76(4), 2003, p. 743.

24 중국인의 사례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今井清一, 「大島町事件・王希天事件と日本政府の対応」,

중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적용된 ‘관헌에 의해서’라는 기준에 맞는 사건은 교일공제회(僑日共濟會)의 회장이었던 왕시티엔(王希天)이 중국인 노동자들이 학살된 오시마마치사건(大島町事件)을 알아보는 도중에 헌병에게 살해당한 사건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관민일체로,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민중이 더 앞서는 형태로 학살된 사례들이었다.

그런데 계급을 분리시킨 ‘민족’이라는 기준은 이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요컨대 조선민족을 피살자의 ‘중심’에 놓고 나머지 피살자를 소위 ‘오인’이라 불리는 영역으로 ‘주변화’시키는 언설이 3대 테러사관에 비판을 제기한 이후 강덕상이 밝아 간 방향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관헌에 의해서나 관민일체나—에서 시작된 구별이 어느새 피살자의 성격—조선민족이냐 아니냐—을 분절화시키는 언설로 변하고 있는 점이다.²⁵ 이렇게 해서 ‘계급’과 ‘민족’의 구분으로 시작된 강덕상의 문제제기는 ‘조선민족’을 학살의 중심적 대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 원인으로서 ‘제국식민주의의 역사’를 되새기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연구시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藤原彰·松尾尊兌 編, 『論集現代史』, 筑摩書房, 1976; 仁木ふみ子, 『震災下の中国人虐殺』, 青木書店, 1993; 田原洋, 『関東大震災と中国人: 王希天事件を追跡する』, 岩波書店, 2014. 청각장애인의 사례에 관한 연구는 小藪崇明, 「関東大震災下に虐殺されたる者: 近代日本における音声言語のポリティクス」, 『東京社会福祉史研究』 6号, 2012. 정신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없지만, 당시 신문보도를 통해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自警団誤殺事件の判決言い渡し: 群馬県下の精神病者殺し」, 『東京日日新聞』, 1923. 11. 5., 山田昭次 編,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関係史料V: 朝鮮人虐殺関連新聞報道史料1』, 緑蔭書房, 2004, 205쪽; 「互に相手を不逞鮮人と思ひ違へて暴行: 高崎夜警団の殺人事件」, 『東京日日新聞(群馬版)』, 1923. 10. 26.,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関係史料V: 朝鮮人虐殺関連新聞報道史料1』, 272~273쪽; 「殺人公判延期」, 『東京日日新聞(茨城版)』, 1923. 12. 14.,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関係史料V: 朝鮮人虐殺関連新聞報道史料1』, 337쪽. 부락민의 사례에 관해서는 이른바 ‘후쿠다무라(福田村) 사건’을 들 수 있다. 辻野彌生, 『福田村事件: 関東大震災知られざる悲劇』, 齋書房出版, 2013; 石井雍大, 「千葉県福田・田中村事件研究の歩み: 混乱の中で殺された日本人」, 関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 編,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25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기점으로 관동학살 문제에 새로운 ‘존재론적’ 재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경미, 「관동대지진 학살문제의 존재론: 방법으로서의 ‘오인’과 가능성으로서의 ‘지인」, 『일본사상』 45호, 2023.

3. 역사 속의 논쟁과 누락된 문맥

1) 발생근원 논쟁의 추이: 민중에 대한 태도

강덕상과 마쓰오 다카요시의 논쟁은 유언의 발생근원이 ‘관헌이나 민중이냐’를 놓고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설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먼저 강덕상의 주장이 관헌 ‘날조설’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자. 당시 치안대책을 지휘했던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 내무성 경보국장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세 사람 사이에서 조선인 폭동설이 “날조유포”²⁶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중을 위협시키는 인식을 지적했다. 즉 굶주린 이재민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계엄령을 떠올리게 했지만 발포를 위해서는 “전시 또는 사변”²⁷에 해당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에 폭동설을 의도적으로 날조하여 계엄령을 발포함으로써 민중의 불만을 가상의 적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덕상의 주장은 명백한 ‘날조설’에 있었다.

오히려 당시 ‘발생설’에 걸맞은 주장을 했던 것은 사이토 히데오(齊藤秀夫)였다. 사이토는 강덕상-마쓰오 다카요시 논쟁이 있기 전에 요코하마(横浜)를 사례로 논문을 낸 바 있었다. 1958년 11월 『역사평론』에 게재된 그의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소동」은 전후 유언의 발생근원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 알려져 있다. 논문에서 사이토는 경찰서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소재지에서 유언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즉 유언의 발생에 관련이 깊었던 것은 ‘민중이 아니라 경찰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²⁸

이렇게 볼 때 강덕상의 논문은 사이토가 제시한 비판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관헌(경찰) ‘발생설’에서 관헌 ‘날조설’로의

26 姜徳相, 「關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4쪽.

27 「〈参考〉嚴戒令」,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13쪽.

28 이때 경찰이 중심이 된 것은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도시로 해군의 관할에 있던 요코하마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齊藤秀夫,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さわぎ」, 『歴史評論』 99号, 1958.

도약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문제로 추궁의 화살을 ‘관현’에게 되돌린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이었다.

마쓰오 다카요시의 반론은 주로 ‘날조설’을 겨냥한 것이었다. 강덕상은 미즈노·아카이케·고토 세 사람이 계엄령을 고려한 시점과 유포를 결정지은 고토의 진보가 작성된 시점을 검토함으로써 날조설을 논증했는데, 마쓰오의 반론은 강덕상이 검토한 시점보다 먼저 유언이 보고된 사례를 지적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료비판에 근거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실증 이상의 문제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마쓰오는 날조설에 대한 비판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

이상 나는 강덕상 씨 논의의 자료적 근거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입론에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관현의 일관된 유언날조 및 선전공작을 주장했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에게는 일본인민은 선량무구하고 모든 악은 제국주의 지배자에게 귀착한다는 신념이 있고 그것이 모든 사실판단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⁹

일본인민(민중)은 선량무구하고 모든 악은 제국주의 지배자(관현)에게 있다는 신념이 날조설이라는 자료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천착한 이유라는 지적이다. 이 구절은 마쓰오의 말대로 실증을 넘은 강덕상의 문제의식(신념)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이에 반론을 제기한 마쓰오의 문제의식 또한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마쓰오 역시 관현의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민중 속으로 더 파고든다. 마쓰오는 “정부 공인 유언”이 “민중심리에 던져진 메가톤급 폭탄”이었다면 “자연 발생 유언”은 “지하에 묻혀 있던 무수한 지뢰”와 같았다고 비유한다. 폭탄을 던진 “관현의 죄악은 끝까지 추궁되어야” 하지만 “지뢰들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 또한

29 松尾尊允,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2, 3の問題」, 49쪽.

“제국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³⁰ “제국주의의 해독(害毒)은 본래 선량한 인민마저 침범할 수 있기에” 민중에 대한 비판의식은 사건 서술에서 결코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³¹

이렇게 볼 때 양자가 대립했던 지점은 ‘관헌이나 민중이냐’라는 양자택 일적인 구도로만 해석될 수 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민중에 대한 태도’에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쓰오의 문제의식은 관헌의 책임을 추궁하는 언설이 민중에 대해 일종의 낙관(optimism)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점에 있었다. 이 점에서는 관헌 ‘발생설’을 제기한 사이토의 연구도 마찬가지로였다. 요컨대 발생근원을 둘러싼 논쟁은 사이토·강덕상에 대해 마쓰오 다카요시가 맞서는 구도—관헌 발생·날조 vs. 민중 발생—로 전개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민중을 대하는 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자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사이토와 강덕상의 입장은 왜 마쓰오로 하여금 ‘민중’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비쳐졌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960년대 학살연구가 본격화된 시점으로 돌아가 당시 학살 문제가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시 말해 당시의 콘텍스트 속에서 이들의 연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학살연구: 조일우호의 토대

학살연구의 당시대적 위상을 묻기 위해 필자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한일회담 반대운동과의 관계다. 이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일조협회(日朝協會)의 조일우호운동과 불가분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까지 1960년대 학살연구가 추진된 배경에 일조협회의 역할을 지적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한 연구는 없다. 이는 일조협회 자체를 주제로 다룬 연구가 부족했던 탓도 있는데, 최근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다룬 연구의 진전과 함께 일조협회의 활동과 성

30 松尾尊允,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2, 3の問題」, 45쪽.

31 松尾尊允,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2, 3の問題」, 49쪽.

격 또한 어느 정도 조명되었다.³² 이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1960년대 학살 연구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일조협회의 조일우호운동이라는 틀 속에서 학살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점, 그 틀이 관헌의 책임을 추궁한 연구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발생근원 논쟁에서 사이토·강덕상과 마쓰오 다카요시 사이를 갈라놓았던 문제, 즉 ‘민중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점이 규명되어야만 ‘3대 테러사관’에 대한 비판의 의의 또한 제대로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1963년 9월 역사과학협의회 기관지 『역사평론』은 「일본과 조선—대진재 조선인 수난 4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다. 강덕상 역시 이 기획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게재된 글(2번)은 금병동과 편지로 낸 자료집의 출간과 함께 발표한 세 편의 글 중 하나였다. 『역사학연구』(7월)에 게재된 글이 날조설을 주장하여 마쓰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역사평론』에 게재된 글은 「만들어진 유언」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날조설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었다. 여기에 함께 실린 가토의 글(6번)을 통해 이 특집에 일조협회가 깊이 관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 과정부터 시계열로 살펴보자.

가토에 따르면 1963년 4월 일조협회 안에 ‘조선인 희생자 조사 위령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령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때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위의 특집에서 첫 번째 글을 맡은 하니 고로(羽仁五郎)였다. 이 <조사·위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4~5월 사이에 재일조선인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강덕상, 박경식, 강제언, 박충일, 이진희가 거론되는데 특히 박경식은 “조선대학”의 교수로, 강덕상은 “재일조선인

32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 国交正常化をめぐる』, クレイン, 2005; 朴正鎮, 「北朝鮮と日本革新運動: 日本における日韓会談反対運動の発生(1960~62年)」, 『翰林日本学』 17号, 2010; 박정진,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일본인의 귀국협력: ‘일조우호운동’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와역사』 91호, 2011; 박정진, 「‘일조협회’의 결성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국제정치논총』 51집 2호, 2011; 朴正鎮,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平凡社, 2012; 김현수, 『일본에서의 한일 회담 반대운동: 재일조선인운동을 중심으로』, 선인, 2016.

〈표 1〉 1963년 9월 『역사평론』 특집 내역

No.	제목	저자
1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니 고로(羽仁五郎)
2	만들어진 유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하여	강덕상(姜徳相)
3	나의 체험	신창범(慎昌範)
4	관동대지진 시의 학살사건으로 배우는 두 가지 입장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5	한일회담과 ‘일본인의 마음’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6	관동대진재의 교훈: 일조협회의 조사·연구활동	가토 다쿠조(加藤卓造)
7	재일 조선공민의 조국 왕래 실태에 대해	권석봉(權碩鳳)

과학자협회” 소속으로 소개되었다.³³

박경식과 강덕상은 1960년경부터 연구를 함께해 왔던 사이로 당시 조선대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강제연행 연구에 천착했던 박경식 곁에서 학살연구에 착수했던 것이 강덕상이었다. 한편 박경식과 교류를 시작한 무렵 강덕상은 ‘재일본조선인 사회과학자협회’의 역사부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모임은 “조선학교 교원이었던 김종명을 리더”로 “그 밑에 박경식, 이진희” 등 위에서 언급된 인물들도 참여하고 있었다.³⁴

요컨대 당시 북한과 조선총련의 영향하에 있던 기관에서 활동했던 재일 조선인 연구자들이 1960년대 초반부터 학살사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조협회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흡수함으로써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지 감도 못 잡았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⁵ 이리하여 1963년 5월 12일에는 사이타마현(埼玉県)

33 加藤卓造, 「関東大震災の教訓: 日朝協会の調査・研究活動」, 『歴史評論』 157号, 1963, 43쪽.

34 姜徳相聞き書き刊行委員会, 『時務の研究者 姜徳相: 在日として日本の植民地史を考える』, 三一書房, 2021, 128~142쪽. 이들의 작업은 1963년에 간행된 두 권의 자료집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도 언급한 『현대사자료6: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으로 이는 강덕상과 금병동의 편찬으로 나왔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에 나온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진상과 실태』로 이는 조선대학교 교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에 관한 연구자료 편집위원회’에 의해 편찬된 자료집이다. 두 자료집은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겹친다. 朝鮮大学校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編集委員会 編, 『1923年・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 総合企画舎ウイル, 2008(초판 1963).

35 加藤卓造, 「関東大震災の教訓: 日朝協会の調査・研究活動」, 43쪽.

혼조시(本庄市)에서, 5월 19일에는 지바현(千葉県) 후나바시시(船橋市)에서 각각 현지조사를 실시했다.³⁶ 이어 6월 19일에는 도쿄 아라카와(荒川) 부근에서 벌어진 학살의 생존자인 신창범을 초청하여 <체험담을 듣는 모임>을 가졌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1963년 6월에는 일조협회 제8회 전국대회가 열렸다. 거기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비판 및 청산 사업”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여, 그 “구체적 목표”로서 “진재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의 실태조사와 위령제를 추진할 것”이 결정되었다.³⁷ 이어 7월 17일에는 ‘관동대진재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강연회’(이하 ‘희생자 강연회’)가 열렸는데, 『역사평론』 특집에 실린 세 명의 글(하니 고로, 강덕상, 신창범)은 이때의 강연기록을 활자화한 것이기도 했다.

가토에 의하면 이와 같은 활동은 “작년 봄부터 올해 초에 걸쳐 조일우호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³⁸ 이러한 인식은 ‘희생자 강연회’가 열린 의의에 대한 하니 고로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하니는 “일본의 국제관계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서 조일 간에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정책을 촉구하는 데 학살문제의 해결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³⁹ 이와 같은 인식이 일조협회 안에서 언제부터 공유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⁴⁰ 일조협회와 학살연구가 연계된 것은 가

36 이와 같은 조사활동의 성과로 나온 것이 다음 자료들이다.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9・2集会実行委員会 編, 『埼玉県内における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資料』,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9・2集会実行委員会, 1973[1963]; 日朝協会豊島支部 編, 『民族の棘: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の記録』, 日朝協会豊島支部, 1973;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実行委員会 編, 『かくされていた歴史: 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実行委員会, 1974.

37 加藤卓造, 『日朝協会の記念事業』, 『労働運動史研究』 37号, 1963, 43쪽.

38 加藤卓造, 『関東大震災の教訓: 日朝協会の調査・研究活動』, 43쪽.

39 羽仁五郎,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40周年を迎えるにあたって』, 『歴史評論』 157号, 1963, 4~7쪽.

40 학살 피해자에 대한 추도행위는 전전부터 있어 왔다.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をめぐる私たちの精神状況を探る: 朝鮮人虐殺事件関係の墓碑, 追悼碑を手がかりとして』(第1章),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 鄭榮桓, 『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運動と「関東大虐殺」問題: 震災追悼行事の検討を中心に』, 関東大震災90週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 編, 『関東大震災記憶の継承: 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経済評論社, 2014. 또한 1953년 6월에 결성된 초기 일조협회 지도부에는 학살 피해자에 대한 추도행사에 참여했던 불교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이 일조협회 내에서 학살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성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불교계 인사들은

토의 언급대로 '1962년 봄부터 1963년 초에 걸쳐 전개된 조일우호운동'이라는 틀 속에서는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일조협회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먼저 협회의 '조일우호운동'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1955년 11월의 제1회 전국대회를 통해 일본인 중심의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같은 해 2월 남일 성명을 통해 제시된 북한의 대일 접근외교(인민외교) 노선과 보조를 맞춰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조일우호운동을 추진했다. 이것이 1958년 재일조선인 귀국운동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지만 북송에 대한 열기가 저조해지자 협회의 운동 역시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준 것이 안보투쟁과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연계였다. 1960년 6월에 체결된 신안보조약은 한일회담을 동아시아에 냉전적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인식을 성립시켰는데, 이에 일조협회는 공산당, 사회당,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등 21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일한회담 대책연락회'를 발족시켰다. 이것이 '안보조약 개정 저지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와 연계되어 발전적으로 해소된 것이 바로 '1962년 3월'이었다.

요컨대 가토가 '1962년 봄'부터 전개되었다고 언급한 조일우호운동이란 바로 이 국민회의로 총결된 운동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다. 국민회의는 1962년 3월 전국통일 중앙경기대회(제1차 한일회담 반대 통일행동)를 열어 정식으로 '한일회담 분쇄'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5월 19일 '안보반대의 역사적 대투쟁을 기념하는 전국통일행동'(제2차 통일행동)으로 이어져, 10월부터 전개된 블록연쇄집회의 결과 히비야(日比谷)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중앙집회로 집결되었다(제3차 통일행동).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이듬해 초' 국민회의의 관심이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기항문제로 옮겨지면

1955년 11월 제1회 전국대회에서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물러났다. 초기 일조협회에 관해서는 박정진, 「'일조협회'의 결성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119~120쪽; 朴正鎭, 『日朝冷戰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75~82쪽, 193~197쪽; 김현수,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재일조선인운동을 중심으로』, 134~138쪽.

서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조협회에서는 ‘1963년 초’에 이르러 기왕의 운동에 한층 더 힘을 주게 된다. 특히 3월부터 조선총련이 자유왕래운동을 추진하게 되자 일조협회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⁴¹ 『역사평론』 특집에 실린 권석봉의 글(7번)은 이러한 관심의 공존을 잘 보여 준다. 관동학살에 대한 조사와 위령을 목표로 내세운 제8회 전국대회 역시 그 전제로서 “『일한회담』을 분쇄하는 운동”과 “재일조선인이 조국에 왕래하는 자유를 실현하는 운동”을 “중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⁴²

이렇게 볼 때 관동학살 연구는 조일우호운동 속에서도 한층 밀려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1960년대 ‘조일우호의 토대’로서 발견된 과제였다. 일조협회는 당시 국민회의로 대표되는 일본 혁신계와 북한, 그리고 재일조선인 사회에 영향력을 지닌 조선총련, 이 3자 간을 엮여주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⁴³ 이러한 성격은 시대에 따라 북송, 한일회담, 자유왕래 등 다양한 형태를 취했지만, 그 어느 것이나 조일우호의 틀에서 벗어나는 운동은 없었다. 그런 틀 속에서 협회는 조일 간의 ‘인민연대’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학살연구 역시 그러한 운동의 토대로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3) 계급과 민족의 공존: 인민연대의 당위성

발생근원 논쟁에서 사이토·강덕상과 마쓰오 다카요시를 갈라놓았던 지점, 즉 ‘민중을 대하는 태도’ 역시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쓰오는 “제국주의의 해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일본인민”에 대한

41 자유왕래운동에 대해서는 朴正鎭, 『日朝冷戰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456~463쪽; 김현수,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재일조선인운동을 중심으로』, 141~146쪽.

42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 国交正常化をめぐる』, 309쪽에서 재인용.

43 박정진은 “일본 혁신계와 북한의 연계” 중심에 “일조협회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총련의 귀국운동을 혁신계의 안보투쟁과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이는 귀국운동을 사례로 한 말이지만 협회의 조일우호운동 자체를 성격 짓는 말로 이해된다. 박정진,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일본인의 귀국협력: ‘일조우호운동’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54쪽.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⁴⁴ 한편 사이토·강덕상은 그보다도 관헌의 책임 추구를 중시했는데, 그것은 한일회담의 분쇄라는 목표 아래 조일 간의 ‘인민연대’를 추구하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점은 강덕상의 언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사학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강덕상은 날조설을 주장하기에 앞서 학살연구를 수행하는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민에게 가한 잔인하기 그지없는 박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그것을 “조일 양 민족에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한일회담을 생각하는 데 과거의 빛”으로 삼는 것, “본고의 의도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⁵ 그 역시 학살연구를 한일회담을 반대(생각)하기 위한 토대(과거의 빛)로 발견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학살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본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일본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사회적 성장, 그리고 자신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조선인민의 독립투쟁의 격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한층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진다. 본고가 해명하고자 하는 진재 당시의 조선인 대학살도 일본 프롤레타리아트가 피압박민족의 원조 없이는 일본인민의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기본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반동공세, 환언하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일 양 민족의 연대감을 맹아단계에서 압살하려고 한 폭거였다는 것이 지금까지 종종 논의되어 왔다.⁴⁶

위의 문장은 서론의 첫 번째 단락을 인용한 것이다. 글의 얼굴과 같은 구절에서 강덕상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즉 대전을 통

44 松尾尊允,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2, 3の問題」, 49쪽.

45 姜徳相, 「関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1쪽.

46 姜徳相, 「関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1쪽.

해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발전은 일본 노동계급의 성장과 조선 독립운동의 격화를 초래했는데, 이로써 제국주의를 향한 피압박계급(일본인민)과 피압박 민족(조선민족) 간의 연대감이 조성되고 있었다. 학살은 그 맹아를 압살하기 위해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폭거였다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강덕상이 이러한 설명을 ‘말해진다’ ‘중중 논의되어 왔다’ 등의 종결어미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소개투가 갖는 의미를 『역사평론』에 실린 글을 통해 확인해 보자.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은 1963년 7월에 열린 <희생자 강연회>에서 했던 발표를 활자화시킨 것이었다. 강덕상은 이때의 강연을 “하나의 서두”[前置き]로부터 시작했다. 우선 그는 3·1운동과 5·4운동을 “해방운동, 독립운동의 하나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전년에 일어난 쌀소동을 “하층민이 참여한 최초의 큰 반정부운동”으로 규정했다. 이를 전제로 쌀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3·1운동과 5·4운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묻는데, “유행하는 말로 하면 국제연대라는 문제”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그런데 강덕상은 이에 “그러한 연대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말은 일견 학살 연구의 배경에 깔린 ‘조일우호’와 ‘한일회담’, 그리고 ‘인민연대’에 대한 정서를 모조리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좀더 복잡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는 왜 연대감이 없었는지 자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점에 계급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라는 문제로 바뀌치기 당한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선이 해방되어 독립할 때까지, 중국이 지금처럼 거대한 나라가 될 때까지 일본의 지배자는 일본국민을 교묘하게 지도하여 계급을 민족으로 바뀌치고 침략을 저질렀다. 이것이 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관동대진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런 어리석은 것을 통해 당시 고조되고 있던 일본인민의 계급의식을 억누르고 천황 폐하의 적자와 조선인·중국인은 다르다는 우월감을 실지로 교육하고 후일 대규모 침략전쟁을 저지르는 심리적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이 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요즘 부활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가 과거

의 꿈을 되찾고자 여러 획책을 꾸미고 있는 현재의 한일관계와 결코 무관한 일
이 아닙니다.⁴⁷

위에서 강덕상은 연대감이 없었던 이유를 지배자에 의한 ‘바뀌치기’로
설명한다. 이들이 당시 ‘계급’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던 일본인민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테면 ‘천황의 적자’와 같은 교육을 주입함으로써 ‘민족’으로
바뀌치기했다. 이것이 연대가 부재했던 이유다. 관동학살은 이러한 지배자
의 ‘바뀌치기’가 가장 그 효과를 나타낸 사건이었다. 강덕상은 이러한 이해
를 현재의 한일관계, 즉 ‘한일회담’으로 연계시킨다. 한일회담은 관동학살
을 일으킨 ‘과거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확실히 앞서 소개투로 서술된 이해와 차이를 갖는다. 무
엇보다도 그는 연대의 ‘맹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살 역시 ‘피압박
계급과 피압박민족 간의 연대’를 압살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을 향한 범죄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학살사건을 ‘민족
문제’로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이 고찰해야 하는 것은 강
덕상이 이 문제를 ‘어떠한 입장’에서 보고 있었는가다.

‘바뀌치기’라는 말에 함축된 문제의식은 그가 이 문제를 ‘계급적 입장’
에서 보고 있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계급’을 ‘민족’으로 바뀌치
기 당했다는 그의 말은 ‘연대에 대한 당위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
래 조성되어야 했던 연대가 지배자에 의해 좌절된 과거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덕상은 그러한 과거(학살사건)를 현재
의 문제(군국주의의 부활로서의 한일회담)를 조명하기 위한 빛(토대)으로 소환했
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민족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다시 말해 ‘계급과 민족의 공존’은 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관동학살은 일본의 지배계급이 조일 간에 싹튼 연대의 맹아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인식은 1960년대 학살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47 姜徳相, 「つくりだされた流言: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について』」, 9~10쪽.

〈표 2〉 1963년 7월 『노동운동사연구』 특집 내역

No.	제목	저자
1	들어가며	시오타 쇼베에(塩田庄兵衛)
2	대진재하 3사건의 자리매김	이마이 세이이치(今井清一)
3	대진재하 조선인 피해자 수에 관한 조사	강덕상(姜德相)
4	순노동자조합과 대진재	도자와 니사부로(戸沢仁三郎)
5	난카쓰 노동회와 가메이도 사건	미나미 이와오(南巖)
6	가메이도 사건의 희생자	후지누마 에이시로(藤沼栄四郎)
7	대진재와 오스기 사카에의 회상	아키야마 기요시(秋山清)
8	그날의 고토 지구(江東地区)	미나토 시치로(湊七良)
9	대진재와 항의운동	아오가키 젠이치로(青柿善一郎)
10	관동대진재 사건 일지	마쓰오 히로시(松尾洋)
11	오스기 사카에에 대하여	가와카미 다미오(河上民雄)

공통적인 이해였다. 『역사평론』 특집에 실린 요시오카 요시노리의 글(4번)에서도 학살은 “일본 군국주의와 천황제 군대·경찰”이 “조일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싹틀 때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언급되었다. 요시오카는 당시 공산당원으로서 일조협회의 학살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이 강덕상도 참여했던 『노동운동사연구』 특집의 논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1963년에는 『노동운동사연구』에서도 관동대진재 40주년 특집을 냈었다. 여기에도 강덕상의 글(3번)이 실렸다.⁴⁸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함께 특집을 낸 인물들이다. 특집을 이끈 시오타 쇼베에(塩田庄兵衛)는 당시 도쿄도립대학 교수로 노동운동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

48 이 글은 날조설이 주된 내용이었던 앞의 두 편(『역사학연구』 『역사평론』)과 달리 학살 당시에 이루어진 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것이었다. ‘6천 명설’의 근거가 된 김승학 조사, 그와 협조관계로 이루어진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조사뿐만 아니라 학살을 ‘과소평가’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사법성 조사와 책임이 쉰 위진 자경단의 입장을 대변한 흑룡회(黑龍會) 조사도 함께 다루었다. 姜德相, 「大震災下の朝鮮人被害者数の調査」, 7~12쪽.

오타는 <조사·위령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7월에 열린 ‘희생자 강연회’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러한 시오타의 경력이 특집 기획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⁴⁹ 위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특집의 주를 이루었던 것은 가메이도·아마카스 사건에 관한 글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시오타(1번)와 이마이(2번)의 글은 “조선인 학살사건, 가메이도 사건, 오스기 사건”을 “백색테러”⁵⁰ 혹은 “액살(扼殺) 3대사건”⁵¹으로 자리매김한 글로, 말하자면 ‘3대 테러사관’의 선구로 평가⁵²되는 연구다.

이들의 관점은 ‘관동대진재 5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행사 실행위원회’(이하 <50주년 실행위원회>)⁵³에 의해 1975년에 출간된 『역사의 진실: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이때 위원장을 맡은 다카하시 신이치(高橋磯一)와 함께 서문을 썼던 인물이 당시 일조협회 회장이었던 와타나베 사헤이(渡辺佐平)였다. 학살연구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조일연대의 토대’로서 그 의의를 조명받고 있었던 셈이다.⁵⁴

그런데 이 책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마이와 사이토의 이름으로 쓰인 제1부와 이누마루 기이치(犬丸義一)의 이름으로 쓰인 제2부다. 앞서 보

49 시오타에 따르면 특집의 모체가 된 것은 1963년 “5월 8일 밤에 열린 예회(例会)”와 “5월 29일 밤에 열린 진재4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집회”이다. 특히 후자는 “조일 양국의 연구자와 관계자가 100명 이상 모인 획기적인 행사”로 여기에 “강덕상”도 참여했다. 앞서 보았듯이 5월은 <조사·위령 특별위원회>와 재일조선인 연구자들의 협력으로 지역(치바, 사이타마) 조사가 이루어지던 때였다. 塩田庄兵衛, 「はじめに」, 『労働運動史研究』, 37号, 1963.

50 今井清一, 「大震災下の諸事件の位置づけ」, 『労働運動史研究』, 37号, 1963, 1쪽. 표지에서 이마이의 글의 제목은 ‘제사건’이 아니라 ‘3사건’으로 표기되어 있다.

51 塩田庄兵衛, 「はじめに」.

52 松尾章一, 「関東大震災史研究の成果と課題」, 20~21쪽.

53 <50주년 실행위원회>는 1973년 7월 28일에 결성되었다. 결성을 이끈 것은 일조협회 사이타마현 연합회다. 사이타마현 연합회는 1963년 5월 12일에 <조사·위령 특별위원회>에 의해 실시된 현지조사를 계기로 이 지역의 조사·추도 사업을 이끌게 되었다. <50주년 실행위원회> 역시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결성된 것이다. 그 결과물이 앞서 각주에서도 언급한 자료집 『은폐된 역사』(かくされていた歴史)(1974)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역사교육자협의회와 협력관계를 진행되었다. 이 점은 지바현에서 진행된 조사·추도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 역시 1963년 5월 19일에 <조사·위령 특별위원회>에 의해 실시된 현지조사를 계기로 했다. 지바현에서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田中正敬, 「千葉県における関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実行委員会の活動: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一九八三年)刊行まで」(第5章), 『地域に学ぶ関東大震災: 千葉県における朝鮮人虐殺 その解明・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 111~134쪽.

54 渡辺佐平, 「真の日朝連帯をめざして(序にかえて)」,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実行委員会 編, 『歴史の真実: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現代史出版会, 1975, 3~4쪽.

왔듯이 사이토는 1958년에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소동」을 통해 관현 발생 설을 제시했던 인물로, 그는 이 논문을 계기로 당시 요코하마시립대 교수였던 이마이와 인연을 맺게 된 듯하다.⁵⁵ 한편 이누마루는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제2부를 썼는데, 이 글은 『노동운동사연구』 특집에 제시된 시오타와 이마이의 관점(3대 테러사관)을 “편집자의 토의에 입각하여 정리한 것”이었다. 당시 제3부의 편집을 맡은 마쓰오 쇼이치는 이누마루의 글을 “전후 ‘과학적 역사학’의 입장”에 선 연구자들의 “통설”을 정리한 것이었다고 회상한다.⁵⁶

이누마루가 ‘과학적 역사학’의 입장에서 서술한 관동학살의 역사적 배경은 강덕상이 『역사학연구』에 실린 논문의 첫 단락에서 소개투로 서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조선인 학살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확립된 독점자본주의를 사회적 기반으로 형성된 노동자계급 중심의 일본인민”과 “재일조선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 사이에 짝튼 반제국주의적 연대의 맹아를 제거하기 위해” 단행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누마루는 “일본의 지배계급 혹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전개된 “조선인민 또는 일본인민”의 투쟁, 예컨대 쌀소동과 3·1운동, 그리고 5·4운동을 중심주제로 다루었다.⁵⁷

여기까지 오면 이들이 어떠한 ‘역사’ 속에 관동학살을 자리매김하고 있었는지 그 정체가 잡힐 것이다. 마쓰오 쇼이치의 말처럼 이들은 전후 ‘마르크스주의(과학적) 역사학’의 입장에서 학살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55 사이토는 요코하마 출신의 지역 역사가다. 전후 1948년경에는 도쿄의 산별회의(전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 1946년 설립) 서기국에 근무하면서 지역의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1950년 봄부터는 다시 요코하마로 돌아와 미군기지 내에 잠복 근무하면서 노동운동을 지도했다. 이때 알게 된 조선인 노동자를 통해 학살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지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1958년의 논문이 나왔던 것이다. 사이토와 이마이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가나가와현사』(1971~1983)의 편집에 참여했을 당시 사이토의 직함은 요코하마시립대 강사였다.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大震災70年をどう考えるか」, 関東大震災七〇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 編,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 日本経済評論社, 1994, 18~20쪽; 神奈川公文書館, 「執筆分担一覧」, <https://archives.pref.kanagawa.jp/>(최종 검색일: 2023. 12. 2.).

56 松尾章一, 「関東大震災史研究の成果と課題」, 21쪽.

57 犬丸義一,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事件の歴史的背景」, 『歴史の真実: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137~144쪽, 173쪽.

있었던 셈인데, 전후 그러한 입장에서 현대사 서술을 시도한 책이 바로 『쇼와사』였다. 1955년에 출간된 이래 일본 학술계를 휩쓸었던 이 책은 이마이의 저작이기도 했다.⁵⁸ “왜 우리 국민은 전쟁에 빠져들었을까”⁵⁹라는 물음에 답을 시도한 이 책은 강좌파의 입장에서 쇼와의 정치사를 서술하려고 했다.⁶⁰ 따라서 그 정치구도는 “천황제를 주축으로 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국민’(전위+대중)”⁶¹의 대결구도를 토대로 했다.

이러한 구도는 관동학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서술에서도 발견된다. ‘천황제 중심의 군대와 경찰’(관현)을 고발하는 구도는 이마이와 사이토, 이누마루는 물론 피지배민족(조선인)에 대한 ‘지배자’(관현)의 폭력을 고발한 강덕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유했기 때문이다. 단, 쇼와사의 서술에서 ‘피지배자’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민’—전위로서의 공산당과 그와 함께하는 대중—으로 상상되었다면, 관동학살의 서술에서 ‘피지배자’는 조일 간에서 연대를 형성한/해야 할 ‘인민’을 의미했다.⁶²

하지만 국민이 됐건 인민이 됐건 지배자와의 대결구도에서 그 존재가 이해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처럼 ‘피지배자’로서의 위상을 지닌 존

58 『쇼와사』는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 이마이 세이치,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의 공저로 출간되었다. 물론 집필을 이끌었던 것은 도야마로, 그와 10살 차이 나는 이마이는 그저 ‘옆에서 바라보면서 몇 마디 덧붙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이후에도 강좌파 역사학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점은 다음 회상을 통해서도 분명하다. 「今井清一, 『昭和史論争と私』, 大門正克 編,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日本経済評論社, 2006, 309쪽.

59 大門正克, 『昭和史論争とは何だったのか』,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6쪽.

60 “역사발전은 기본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대립·투쟁에 기초한다면 피지배자의 입장에 서는 비판”이 도야마가 말하는 역사비판이다. 그의 쇼와사는 “27년 테제와 32년 테제 위에 역사비판의 입장”을 구축했다. 遠山茂樹, 『現代史研究の問題点: 『昭和史』の批判に関連して』(『中央公論』1956년 6월),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238~240쪽.

61 戸邊秀明, 『昭和史が生まれる: 1950年代における史学史的文脈の再定位』,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51쪽.

62 이러한 차이는 『쇼와사』에서 관동학살이 다루어지는 방식에도 잘 나타난다. 『쇼와사』는 1959년에 신판을 냈는데, 이때 시대범위를 쇼와사(1926~)에서 현대사(1916~)로 확장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확립되었고 쌀소동은 물론 3·1운동과 5·4운동 등을 중요한 주제로 서술에 받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관동학살 또한 언급되는데, 다만 쇼와사의 단계에서는 아마카와(山川均)의 선언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한 “방향전환의 결실을 저지한” 사건으로 묘사되었다. 요컨대 ‘조일 연대’의 씨앗이 아니라 ‘전위와 대중’의 연계의 씨앗이 지배자에 대항하는 주체(피지배자)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遠山茂樹 外, 『昭和史[新版]』, 岩波書店, 1959, 3~19쪽.

재가 비판의 대상으로서 부각되기란 쉽지 않았다. ‘민중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은 마쓰오 다카요시의 문제제기는 이 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는 낭만주의적 정서가 담긴 가메이 가쓰이치로(亀井勝一郎) 식의 문제제기와는 또 다른 의미의 ‘인간의 부재’를 마르크스주의적 학살 이해에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³ 이러한 인식은 이를테면 ‘책임주체’로서의 민중을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쓰오의 문제제기 — 유언의 발생근원 논쟁 — 는 쇼와사의 ‘국민’에게도 ‘전쟁책임’을 물었던 마쓰자와 히로아키(松沢弘陽)와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의 문제제기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⁶⁴

4) 계급과 민족의 균열: 일본으로부터의 탈출

1960년대 학살연구에서 ‘계급’과 ‘민족’은 공존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일회담 반대’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안보조약의 체결은 한일회담을 ‘군국주의 부활’의 징표로 부각시켰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시켰다. 이들 사이를 매개했던 일조협회가 이 시기 학살연구를 ‘조일우호의 토대’로서 발견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조일 간의 ‘인민연대’는 현실의 정치와 직결된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실’의 가치는 ‘과거’에 대한 이해방식 과도 일치했다. 1960년대 학살연구를 이끈 연구자들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방식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서술체계 안에 사건을 자리매김하면서 ‘천황제 군국주의’(지배자, 관천)에 대항하는 주체로서의 ‘인민연대’(피지배자, 민중)를 부각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63 쇼와사 논쟁과 낭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관자, 「제국 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 일본 낭만파에 대한 기억」, 『일본비평』 2호, 2010.

64 松沢弘陽, 「書評 『昭和史(新版)』」,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265~267쪽; 荒井信一, 「危機意識と現代史: 『昭和史』論争をめぐって」,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271~277쪽.

강덕상이 학살사건을 ‘민족문제’로 보면서도 ‘계급적 입장’에 섰던 것, 다시 말해 ‘계급과 민족의 공존’이 이루어졌던 상황은 그 역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민연대의 당위성’(가치)에 순응하는 서술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사 이해에서 강덕상의 입장이 ‘민족주의적’으로만 이해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문맥’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과 과거가 만나는 ‘역사적 콘텍스트’ 속에서 연구를 조명해야 비로소 포착될 수 있는 문맥이다.

이는 결코 강덕상 개인의 성향만 밝히는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역사 속에 놓였을 때 비로소 그간의 논쟁도 그 함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이토·강덕상(관련 발생·날조설)의 공존관계와 이에 문제를 제기한 마쓰오 다카요시(민중 발생설)의 의도가 독해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점은 ‘3대 테러사관’을 둘러싼 논쟁—피살자의 성격 논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존이 보여야 균열이 보이듯 균열이 인식되어야 비로소 이를 둘러싼 맥락이 분석의 사정(射程)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계급과 민족의 공존’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균열’의 계기가 된 것은 강덕상이 제기한 ‘3대 테러사관’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확인해 뒤야 할 것은 그가 비판을 제기한 시점은 ‘1973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기존의 이해에서는 간과되었던 점이다. 1973년 9월 『역사평론』은 관동대진재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특집을 냈다. 여기에 실린 강덕상의 글은 일반적으로 마쓰오 다카요시의 날조설 비판(1964)에 재반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본론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론이다.

강덕상은 서론에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사이토의 논문(1958)이었다. 사이토가 제목에 ‘소동’[さわぎ]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강덕상의 비판은 유명하다. 그는 사이토가 마치 관헌이나 쓸 법한 표현을 “낫포도 없이” 사용한 것 자체가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낸다고 비판했다.⁶⁵ 앞서 보았듯이 사이토의 논문이 발표된 당시 강덕상은 결코 그와 대립적인 입

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둘의 관계는 관헌(지배자)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에서 일치했으며 천황제 중심의 군국주의·제국주의 일본(지배자)에 대항하는 연대의 서사를 공유했다.

그러므로 1970년대에 들어 제기된 강덕상의 비판은 더 이상 기왕의 ‘공존’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이는 개인의 입장 변화로만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동학살을 바라보는 인식 지형에 큰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식 지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분기점을 의미한다.

도대체 어떤 사실의 무게를 앞에 두고 ‘소동’으로 받아들였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 죽임을 당한 측에서 말하면 어떻게 ‘소동’이겠는가. 그런 조롱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다.⁶⁶

강덕상은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소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토의 논문을 접했을 당시부터 이 말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토로했다.⁶⁷ 하지만 감정을 가진 시점과 토로한 시점은 정확히 구별해서 봐야 한다. 그 감정이 ‘3대 테러사관’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강덕상은 이때 비로소 ‘불편한 공존’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어떠한 맥락이 있었을까. 이 점을 ‘3대 테러사관’을 비판한 아래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자.

65 姜徳相, 「關東大震災下「朝鮮人暴動流言」について」, 『歴史評論』 281号, 1973, 21쪽.

66 姜徳相, 「關東大震災下「朝鮮人暴動流言」について」, 21쪽.

67 예를 들어 姜徳相, 『(新装版)關東大震災』, iii쪽; 姜徳相, 「關東大震災八〇周年を迎えてあらためて考えること」,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2集, 2004, 21~22쪽; 허영란, 「강덕상: 민족운동사 연구의 기초를 놓은 재일역사학자」, 『역사비평』 63호, 2003, 203쪽. 이에 사이토는 논문을 게재할 당시 편집과정에서 낫표가 빠져 버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齊藤秀夫, 「關東大震災史研究が問いかけるもの」, 『歴史地理教育』 506号, 1993.

① 문제는 두드러지게 민족적 정치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불만한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②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선인 학살사건을 가메이도 사건, 오스기 사건과 나란히 놓고 3대 테러사건과 같은 기묘한 연대를 갖게 하는 개설서나 연구서가 나오고 있다. ③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제일 중국인과 오키나와인도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민족의 대외관계 혹은 ‘아시아 차별론’까지 문제를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논의도 있다. ④ 사건을 이처럼 비대화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관련된 사건 하나 하나는 그것만 다루면 중요한 문제에 틀림없지만 6천여 명과 10명 또는 3명의 인명을 나란히 놓거나 연대시키는 것은 조선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의 중대성을 잇따라 훼손시키고 혹은 등가로 만들고 혹은 종속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다.⁶⁸ [연번은 인용자]

다소 긴 문장이지만 중요한 논점을 모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 먼저 ①번에서 강덕상은 학살사건을 ‘민족문제’로 보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것 자체는 1960년대와 변함없는 시각이다. 그런데 ②번에서부터 그는 이전과 달리 ‘3대 테러사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여기서 강덕상이 언급하고 있는 ‘개설서나 연구서’에 앞서 본 책, 즉 <50주년 실행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이마이, 사이토, 이누마루, 마쓰오 쇼이치 등이 참여한 『역사의 진실』(1975)이 포함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대 테러사건에 대한 비판은 그가 이제 ‘계급적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④번에서 가메이도·아마카스 사건과 조선인 사건을 ‘나란히 놓거나 연대시키지 말라’고 언급한 데서 잘 드러난

68 姜徳相, 「関東大震災下「朝鮮人暴動流言」について」, 21~22쪽. 위에 인용한 구절은 1975년에 출판된 『관동대진재』에도 큰 수정이 없이 수록되었다(제10장 사회주의자의 문제 중 ‘몇 가지 시각’이라는 소절에 수록). 1975년에 중앙공론사에서 출판된 『관동대진재』는 1997년에 절판되었고 2020년에 신간사에서 『(신장판)관동대진재』로 복각되었다. 한편 2003년에 청구문화사에서 출판된 『신판 관동대진재: 학살의 기억』도 『관동대진재』(1975)를 모체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판이다. 이 청구문화사판에서는 위의 인용한 구절 중 ④번에 해당되는 문장은 삭제되었다. 姜徳相, 『新版 関東大震災: 虐殺の記憶』, 靑丘文化社, 2003, 270쪽.

다. 그의 학살연구는 이제 ‘연대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의 ‘구별’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히 사건의 성격—관현에 의해서나 관민일체나—에 의거한 구별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의 성격 구별은 사례의 확대에 따라 피살자의 성격—조선민족이나 아니냐—에 의거한 구별로 변했기 때문이다. 3대테러사건에 관한 논쟁이 이처럼 ‘민족주의’ 방향을 취하게 된 것은, 그것이 ‘계급과 민족의 균열’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계급과 민족의 균열’은 명실상부한 ‘민족주의로의 선회’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1973년이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③번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강덕상은 3대사건에 ‘중국인’과 ‘오키나와인’까지 포함시키는 관점, 즉 ‘5대사관’까지 비판의 폭을 넓혀 간다. 민족을 기준으로 피살자를 분절화시키는 언설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이때 언급의 대상이 ‘중국인’과 ‘오키나와인’에 한정되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 텍스트에서 강덕상의 언급은 그 이상의 피살자에게 미치지 않았다. 예컨대 그가 “도호쿠인”(東北人)⁶⁹이나 “일본인 오살 피해자”⁷⁰를 거론하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이 점에서 ‘균열’ 역시 1970년대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한일회담이 군국주의의 부활로 간주되고 이에 대항하는 연대가 시공간적 의의를 가졌던 상황은 지나갔다. 대신 1970년대에는 중일 간에서 국교정상화가 추진되어 평화우호조약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패전 이래의 안건이었던 오키나와의 ‘반환-복귀’가 이루어졌던 것도 이때였다. 이러한 정치동향을 반영하듯이 학살연구에서도 1970년대 초반에는 ‘중국인’ 학살에 관한 논문들이 속속히 등장했다.⁷¹ 이마이 역시 그러한 연구를 이끌었

69 姜徳相, 「三大テロ史観について」,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 139쪽.

70 강덕상,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일본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호, 1999, 195쪽.

71 물론 그전부터 중국인 학살에 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실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1970년대에 들어

던 한 사람으로서, 1976년에 발표된 「오시마마치 사건·왕시텐 사건과 일본정부의 대응」은 중국인 학살에 관한 선구적 논문으로 평가된다.⁷²

강덕상의 비판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기되었다. 그는 ③번에서 1970년대 학살연구의 동향을 ‘아시아 차별론’으로 규정한다. 즉 ‘5대사관’은 학살을 ‘차별’의 문제로 치환하여 아시아까지 ‘보편화’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1960년대 ‘연대론’의 폭이 1970년대의 맥락에서 확장되는 상황, 이를테면 ‘조일’에서 ‘아시아’로의 보편화는 그의 눈에는 한일의 특수한 역사—제국과 식민지—문제가 해체당하는 상황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민족주의로의 선화=계급과 민족의 균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그는 학살문제가 ‘일본의 맥락’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서슴없이 드러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④번의 문장은 1970년대 그의 문제의식과 그가 내린 결론의 함의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조선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연대론적 관점’에 반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의의란 한일관계를 얼룩지게 한 ‘제국 식민주의의 역사’이며 그로 인해 일어난 ‘민족문제’로서의 의의다. 연대론적 관점은 그러한 입장, 다시 말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연대론적 관점은 문제를 ‘종속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던 강덕상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에서 학살문제가 다루어졌던 방식에 대해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의 ‘반전적인’ 함의를 잘 드러낸다.

1993년 8월 강덕상은 ‘관동대진재 70주년 기념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진재와 역사연구’ 패널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그는 3대 테러사관에 대해 비판하게 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부터다. 예컨대 小川博司, 「関東大震災と中国人労働者虐殺事件」, 『歴史評論』 281号, 1973; 松岡文平, 「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について」, 『ヒストリア』(大阪歴史学会) 65号, 1974; 松岡文平, 「関東大震災と在日中国人」, 『千里山文学論集』(関西大学) 8号, 1975.

72 今井清一, 「大島町事件・王希天事件と日本政府の対応」, 『論集現代史』, 筑摩書房, 1976.

일본인에게 조선인 학살은 민족문제가 아니라 ‘일본사’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한 관점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3대 테러사건’(조선인 학살사건, 가메이도 사건, 오스기 사건)이라는 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⁷³

전후 관동학살은 ‘일본사’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졌다. 그는 그러한 틀을 깨뜨리기 위해 3대 테러사건을 비판했다고 한다. 3대 테러사건이야말로 그러한 ‘인식’의 전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3대사건이란 단순히 사건을 함께/따로 논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내재된 연대론적 관점은 현실 정치에 대처하는 틀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치이기도 했다. 강덕상의 말대로 관동학살은 줄곧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의의를 조명받아 왔다. 3대사건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로부터의 탈출을 의도한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계급과 민족의 균열’이 ‘민족주의로의 선회’를 수반한 것은 당연하다. ‘일본으로부터의 탈출’은 그의 경우 반전적으로 ‘민족주의’를 확립시켰기 때문이다.⁷⁴

위의 인용문은 강덕상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1970년대에 확립한 인식 틀로 학살문제에 임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한편 이날 기념집회에서 개회사를 맡은 것은 마쓰오 쇼이치였다. 마쓰오는 이번 집회가 “오시마마치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열린 감회를 피력하면서 “조선반도 사람들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과 진정한 우호”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1970년대 아시아로 확장된 ‘보편적 연대론’ 또한 여전히 숨쉬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들의 관계는 어떤 행보를 밟았을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들이 걸어간 두 가지 ‘국제화’의 방향이 100주년을 보내는 현재 어떤 함의를 주는지 비판적

73 姜徳相, 「三大テロ史観について」, 139쪽.

74 강덕상이 1970년대에 ‘자율성’을 추구하게 된 배경으로 조선총련과의 관계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 일조협회와 교류할 때 모체가 되었던 제일조선인 사회과학자협회를 나와 『계간삼천리』에서 활동하게 된 경위가 일본으로부터의 탈출의 ‘이면’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일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학살연구의 기축을 이루었다는 이해에서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으로 검토하겠다.

4. 나가며: 두 가지 국제화의 행방

1980년대는 학살연구에 대중화의 흐름이 일어난 시대로 기억된다. 특히 그동안 일조협회가 견인했던 조사·위령 사업에 “꽃내기 지역주민”⁷⁵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성과들이 나타났다.⁷⁶ 이어 2000년대에는 ‘관동대진재 80주년 기념행사 실행위원회’에 의해 『세계사로서의 관동대진재』(2004)가 간행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세계사’라는 관점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마쓰오 쇼이치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구실로 진행되는 고이즈미 정권의 우경화 정책과 새역모로 대표되는 역사수정주의의 대두를 언급했다. 이러한 정치동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학살연구의 “세계사적 의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3대 테러사건”에 대해서도 “1920년대 아시아의 혁명과 반혁명 정세”를 배경으로 이해하는 “세계사적 관점”을 요청했다.⁷⁷

이러한 관점에서 연대에 대해서도 한층 더 보편화된 모습이 요구되었다. 그 방법으로서 강조된 것이 ‘일본을 뛰어넘는’ 국제교류였다. 마쓰오는 앞으로의 학살연구는 “가해자인 일본인만의 운동이 아니라 피해자인 한국

75 松尾章一, 「關東大震災史研究の成果と課題」, 10쪽에서 재인용.

76 예컨대 1963년 5월에 실시된 <조사·위령 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계기로 하면서, 여기에 역사교육 자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바현의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희생자 추도·조사 실행 위원회’(1979)가 결성되었다. 그 성과물이 『이유없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1983)이다. 千葉県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実行委員会 編,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 關東大震災と朝鮮人』, 青木書店, 1983; 田中正敬, 「千葉県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実行委員会の活動: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一九八三年)刊行まで」, 111~134쪽. 또한 1882년에 결성된 ‘관동대진재 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은 가메이도, 아라카와(荒川), 요쓰기바시(四ツ木橋) 등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바람아 봉선화의 노래를 날라라』(1992)를 간행했다. 關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返悼する会 編, 『風よ鳳仙花の歌をはこべ: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70年』, 教育史料出版会, 1992.

77 松尾章一, 「關東大震災八〇周年の意義と課題」, 『世界史としての關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182~187쪽.

과 중국의 민중 및 지식인과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⁸ 이 점은 개회사에서도 강조되었는데,⁷⁹ 이는 전후 학살연구가 ‘일본(사)’ 안에서만 다루어졌다는 강덕상의 문제제기를 반성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장을 맡은 사카모토 노보루(坂本昇) 역시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일본 바깥’의 연구자들과의 ‘연대’에 힘쓴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들이 강조했던 ‘국제화’의 의의는 비단 연구자의 국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카모토는 이러한 노력을 “휴머니즘의 연대의 고리를 국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로 보았기 때문이다.⁸⁰ 이들의 국제화는 인적교류를 넘어 인식론적 차원에서 모색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국제화의 연장선상에서 제출된 것이 제노사이드, 헤이트 스피치, 레이시즘과 같은 ‘보편적인 관점’들이다. 2000년대 학살연구의 ‘국제화’와 함께 관련 연구들이 나타나게 된 한국학계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⁸¹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 대해 강덕상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

‘불편한 공존’을 깨고 ‘민족주의’로 돌아선 이래 강덕상의 인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학살문제를 ‘민족해방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1973년 당시에는 조짐에 불과했지만,⁸² 이후에 더 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관동대진재 연구 이후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있게” 되었다는 본인의 회상과도 일치한다.⁸³ 결국 그는 갑오농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학살은 이때부터 내려온 “민족해방투쟁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침

78 松尾章一, 「関東大震災八〇周年の意義と課題」, 184쪽.

79 松尾章一, 「開会のあいさつ」,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5~6쪽. 80주년 행사에서 첫 번째 패널은 광운대 김광렬과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 양비아오(楊彪)의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패널에 코멘트를 남긴 브라운대학의 케리 스미스(Kerry Smith)의 참여가 강조되었다. 山口公一, 「シンポジウム①質疑・討論・まとめ」,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65쪽.

80 坂本昇, 「閉会集会・会務報告」,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176~177쪽.

81 김광렬, 「21세기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와 1923년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법의 논리 고찰」, 『한일민족문제연구』 33호, 2017; 강효숙,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민족, 제노사이드」, 『전북사학』 52호, 2018; 김강산, 「제노사이드의 관점으로 본 관동대학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1호, 2023.

82 姜徳相, 「関東大震災下朝鮮人暴動流言について」, 24쪽. 그는 민중보다 관헌을 더 중시해야 하는 이유로 “3·1 인민봉기에서 간도참변으로 이어진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의 고양”을 강조하고 있었다.

83 허영란, 「강덕상: 민족운동사 연구의 기초를 놓은 재일역사학자」, 204쪽.

략과 저항이 만들어 낸 민족대결”의 결과였다는 인식을 수립했다.

여기서 ‘민족해방투쟁’이라는 틀을 ‘국제화’라는 말로 수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연대론적 관점에서 ‘보편적’ 국제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국제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일국사관을 벗어나”는 것을 학살연구의 “국제화”라고 지칭했다.⁸⁴ 이는 학살 문제를 ‘일본사’ 안에서만 다루었던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이 담긴 말이다. 하지만 강덕상의 국제화는 결코 보편적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특수한 역사’에 천착했고 이를 ‘국제화’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그것이 ‘민족해방투쟁사’ 속에 관동학살을 자리매김하는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동학살로부터 100년을 보낸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두 가지 국제화의 갈림길에서 있는 현주소를 알아야 한다. 본고의 분석은 모두가 지점을 보여 주기 위함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동학살은 사건의 시작부터 ‘은폐의 역사’로 막을 열었다. 그 힘은 2023년 현재 약해지기는커녕 ‘역사수정주의’의 대두에 힘입어 거세지는 추세다. 학살연구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지난 60년 동안 ‘공투’(共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밝혔듯이 그 관계는 결코 일심동체였던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더 심오한 인식론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굴곡이다. 요컨대 계급과 민족의 ‘불편한 공존’으로 시작된 학살연구는 ‘균열’을 겪은 후 서로 다른 의미의 ‘국제화’를 달리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학살문제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 인식이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조명해 줄 수 있을까.

민족해방투쟁으로서의 국제화는 ‘학살을 일으킨 주체’들의 인식을 살피는 데 적합한 틀이다. 강덕상과 그의 관점을 계승한 신창우의 연구⁸⁵가 보

84 姜徳相, 「一國史を超えて: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研究の50年(特集 關東大震災90年 朝鮮人虐殺をめぐる研究-運動の歴史と現在(1))」,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68号, 2014. 6., 18쪽.

85 愼蒼宇,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朝鮮人虐殺: 義兵戦争・シベリア戦争・三・一独立運動から關東大震災へ」, 『朝鮮大学校學報』 29号, 2019; 愼蒼宇, 「軍隊による朝鮮人虐殺: 植民地戦争経験の蓄積という

여 주듯이 당시 학살에 관여한 인물들은 고위관료부터 말단주민까지 대부분 조선과 만주 일대에서 군사활동에 종사했던 경험의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살의 주체(군대, 경찰, 자경단)와 그 객체(불령선인 혹은 의병)로 지나치게 집중된 서술은 ‘침략’과 ‘저항’의 역사 속에 피살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한다. 그날 학살된 사람은 불령선인은 물론 아니었거니와 의병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실제 피살자’는 분명히 조선인이었지만 조선인만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학살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민족 중심의 분절화를 피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보편적 국제화가 유일한 대안일까.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신주쿠(新宿)에 위치한 고려박물관에서는 ‘은폐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전시가 열렸다. 그 전시물 가운데 ‘레이시즘 행위의 피라미드’라 이름 지어진 패널은 보편적 국제화의 관점이 현재 취하고 있는 총체적 모습을 잘 보여 준다. 5개의 층위로 나누어진 피라미드에는 ‘레이시즘’ 행위가 아래로부터 ①편견 → ②편견에 의한 행위 → ③차별 → ④폭력 → ⑤학살로 그려졌는데, 이 중 ④폭력에 ‘헤이트 스피치’나 우토로 방화사건이, ⑤학살에 ‘제노사이드’나 관동학살이 들어간다.⁸⁶ 요컨대 ‘레이시즘’을 큰 인식 틀로, 그 속에 행위의 강도에 따라 ‘헤이트 스피치’ ‘제노사이드’ 등이 배치되는 방식이다. 사례로서는 ‘조선인’이 전면에서 다루어지지만 그렇다고 그 인식 틀에 다른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인이나 오키나와인에 대한 학살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도쿄대학 한국학 연구센터에서 열린 100주년 심포지엄 또한 이와 같은 인식 틀로 기획된 행사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⁸⁷ 이와 같

視点から, 『歴史評論』 881号, 2023.

86 高麗博物館, 「関東大震災100年: 隠蔽された朝鮮人虐殺」, <https://kouraihakubutsukan.org/>(최종 검색일: 2023. 12. 5.). 전시물에 관해서는 지인을 통해 사진을 입수했다.

87 東京大学大学院 総合文化研究科 グローバル地域研究機構 韓国学研究センター, 「関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から100年 レイシズムと歴史否定を考える ～国連特別報告者を迎えて」, <http://www.cks.c.u-tokyo.ac.jp/index.html>(최종 검색일: 2023. 12. 5.), <https://m.youtube.com/watch?v=1Bdwx-w8Ugm8>(최종 검색일: 2012. 12. 5.).

은 보편적 관점이 현재 학살문제의 인식 틀로서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그 타당성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의아하게 느껴야 할 문제는 이러한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그 모든 역경을 ‘은폐의 역사’ 편에 선 ‘역사부정’의 힘에 관련짓기에는 지난 과거는 너무나 길고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나 아득하다. 필자가 비판 자체 보다는 그 방식에 자기 성찰적인 눈을 돌려야 한다고 믿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관동학살을 바라보는 일본사회의 눈은 ‘공감’보다는 ‘무관심’이 대세다. 어떻게 보면 이는 지난 100년 동안의 은폐와 부정의 성과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의제기’도 적지 않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무관심이 대세인가를 물어야 한다. 학살연구는 왜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에게 ‘실천적인 공감’을 일으키지 못할까. 이 질문은 민족해방운동사로서의 국제화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던져져야 하지만 ‘보편성’을 추구한 경우에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들의 언설은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잔혹행위를 ‘보편적’ 관점에서 탄핵하는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이 구조에 기반하여 그러한 ‘죄’—비-보편적, 비-인간적 행위—를 저지른 ‘자기’에게 ‘수치’를 촉구한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아마다 쇼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다. 아마다는 80주년 행사에서 학살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의의를 ‘수치의 덧칠’[恥の上塗り]이라는 언어로 설명한다. 학살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은폐함으로써 “덧칠된 80년간의 수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일본의 민중 책임”이라는 방식이다. 아마다는 이를 통해 일본의 민중에게 ‘인간으로서의 수치’를 느끼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⁸⁸

그런데 아마다에게 호명된 일본의 민중은 ‘자기의 수치’에 얼마나 순수할 수 있을까. 마치 1980년대에 학살연구에 몸을 던진 ‘꽃내기 지역주민’들 처럼 어떤 사람들은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진상규명에 나서겠지만, 어떤

88 山田昭次, 「講演 関東大震災と現代」,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アジア・国家・民衆』, 11~13쪽.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기에게 부과된 죄와 수치,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새 ‘인간으로서’의 수치에 맞서 ‘일본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엉뚱한 방향에서 찾게 된다. 이것이 일본의 보수·우익층이 역사문제에 보이는 ‘전도된’ 관심의 정체이며 ‘자학사관’이라는 말이 한때 그토록 호소력을 가졌던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방향에만 해결 방안을 찾고 순수한 인간의 ‘양심’에 미래를 걸어야 할까. 일본의 대중들은 대부분 이제 적극적으로 양심을 갖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전도되지도 못한 채 무관심의 영역에 살고 있다. 오히려 어떤 ‘계기’만 있다면 전도되는 편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민족주의’는 어느 곳에서나 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⁸⁹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현재 무관심의 영역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에게 ‘실천적 공감’의 실현을 탐색하는 본고의 질문은 따라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제기다. 강덕상은 자신의 학문을 “고발사관”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스스로 그 길을 택했음을 선언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일본 역사학계에서 무시해 왔던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⁹⁰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고발자” 노릇을 하게 된 자신의 심정을 “슬픔”과 “혐오감”[嫌らしさ]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가. 일본인은 왜 자기의 문제로서 생각해 주지 않았는가. 조선인으로서 언제까지나 고발자로 있고 싶지 않다. 좀 더 뒤끝없는 상호관계로 있고 싶다. 그런 바람 때문이다.⁹¹

강덕상이 바란 ‘자기의 문제’로 생각해 주는 모습이란 일본인이 마치 자기의 일처럼 조선인(타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는 모습이

89 이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인간주의의 언표’라고 표현한 우카이의 비판은 타견이다. 우카이 사토시, 신지영 옮김, 『주권의 너머에서』, 그린비, 2008, 70~71쪽.

90 허영란, 「강덕상: 민족운동사 연구의 기초를 놓은 재일역사학자」, 217쪽.

91 姜徳相, 「關東大震災六〇年に思う」, 『季刊三千里』 36号, 1983, 25쪽.

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일만큼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상향’도 없다.

그러나 학살문제가 ‘자기의 문제’라는 말만큼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학살은 그날 ‘일본인’이 되지 못한 ‘타자’를 향한 폭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살문제에서 ‘타자성’을 묻는 중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학살 문제 자체는 근본적으로 일본이라는 ‘자기’의 문제다. 다시 말해 그 체제(정치, 문화, 심리)가 갖는 문제이며 그 체제에서 잉태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실천적인 공감은 이 ‘긴장감’ 위에 성립될 수 있다. 자신의 잔혹성에 대한 수치 못지않게 자신도 ‘내일의 조선인’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이 유발될 때 비로소 ‘타자’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⁹² 타자성에 대한 물음도 결론적으로는 이 점을 향하고 있을 테지만 문제는 탈식민주의적 물음이 실제로는 자신의 타자성에 대한 감각에 좀처럼 연계되지 않는 점에 있다.

피차별 부락민으로 구성된 행인 집단에 대한 학살사건—후쿠다무라(福田村) 사건—을 다룬 영화감독 모리 다쓰야(森達也)는 인터뷰에서 제작과정에 겪었던 ‘어려움’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후쿠다무라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미디어의 터부”와 같은 “조선인 학살”을 들춰내는 어려움을 수반했다. 기획은 당초 방송사는 물론 제작사에서조차 모조리 외면을 당했다. 모두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는 역사를 건드리는 위험, 보수·우익에 의한 항의와 상영중지 운동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리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3,500만 엔을 넘는 자금이 모아진 것이다. 성과는 이로 끝나지 않았다. 많은 유명 배우들이 출현을 흔쾌히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개봉된 영화는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흥행을 기록했다. 이에 학살사건을 터부시했던 미디어들마저 취재에 몰

92 도미야마가 말하는 감각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7호, 2012.

려롭게 된다. 모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에 다음과 같은 감상을 남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회나 정치에 대해, 혹은 이 나라가 과거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위화감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도쿄도 고이케 도지사도 학살의 희생자에 대한 추도문을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안보내고 있습니다. 자료는 얼마든지 있어요. 증언도 많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도 ...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 그래서 이 영화를 수단으로 하면 그런 위화감을 표명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뿐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역시 이견 이상하다고, 지금의 일본의 존재방식, 지금의 사회와 지금의 정치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이견 기쁜 오산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⁹³

후쿠다무라 사건은 조선인 학살사건이 아니다. 조선인으로 ‘오인’된 피살자의 사건이다. 그러나 모리는 이 사건을 영상화하는 데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힘과 싸우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예상 밖의 반향을 일으킨다. 돈이 모아지고 사람이 모아지고 외면당했던 미디어까지 움직이게 한다. 모리의 영화가 이와 같은 ‘실천적 공감’을 일으킨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수단’(방법)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체제가 갖는 위화감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리의 인터뷰가 보여주듯이 이 정서에서 ‘조선인 학살’은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타자’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공감대는 이렇게 형성된다. 그리고 이 길에 불편한 공존이 균열된 이후에 ‘가능했던 또 다른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93 沖繩テレビ, 「映画「福田村事件」関東大震災後の虐殺事件を描く」, 2023. 9. 28., <https://www.youtube.com/watch?v=uX0LUQDatCE>(최종 검색일: 2023. 12. 26.).

2023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보도된 기사들을 보다 보면 후쿠다무라 사건에 관한 영화가 얼마나 호소력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가는 방향은 반드시 일정하지만은 않다. ‘우리도 피해자였다’는 전도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적잖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현상 자체에 눈을 감는다면 일본 대중들이 보여 준 실천적 공감의 가능성을 역사수정주의적 서사에 넘겨준 채 또다시 무관심의 영역에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학살문제의 현주소에서 어떤 인식론을 취할 것인지, 100주년을 보내면서 자기 성찰적인 고민이 필요한 까닭이다.

투고일자: 2023. 12. 5. | 심사완료일자: 2023. 12. 14. | 게재확정일자: 2024. 1. 4.

연구논단

관동대지진 학살문제의 인식론: '불편한 공존'의 균열과 '두 가지 국제화'의 행방 | 이경미

2023년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부흥'과 '방재'의 스토리에 밀려 '은폐의 역사'가 답습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학살'이 절대적 관심사로 회자된다. 이 '이야기하는/하지 않는' 사이의 간격은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학살연구가 시작된 지도 벌써 6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일본에서 축적된 성과들이 한국 학계에도 소개되어 새로운 주제들의 발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해진 연구 주제들 만큼 '학살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학살문제의 '인식론'을 문제 삼기로 했다. 특히 주제의 다양화로 다소 혼잡해진 학살연구의 현주소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의 주요 쟁점(유언의 발생 근원, 피살자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에 주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는 연구사를 논쟁사적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접근이 현실의 문제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관동대지진, 학살, 유언, 한일회담, 강덕상

김대중의 말을 통해 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 남상욱

이 글은 국가의 통치성을 재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서 일본 대중문화와 그 개방과 지연은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문화'가 어떻게 국가 통치성의 영역에 재배치되고, 기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의 말 속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문화예술인도 예외 없이 시장 속 인간으로 살아야 함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시 기능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표상하는 김대중의 말은 수용자 중심의 문화교류를 통해 대칭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기대와는 어긋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던 한국이 일본과 대칭적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한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한 개방을 지연하게 되었는데, 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국가가 자신의 통치성 유지를 위해 어떠한 문화를 시장의 바깥에 둘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한일 대중문화 개방을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원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 역시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적 차원의 교류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역할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김대중, 통치성, 신자유주의, 문화 교류, 한일관계

한일 수소차(FCEV) 정책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정책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이유현·김민정·박성빈

기후변화에 기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교통, 에너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였다. 수소차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구매력 상승 등의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차 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실제 수소차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중

ARTICLES

Epistemological Question of the Massacre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The Cleavage of 'Uncomfortable Coexistence' and the Whereabouts of 'Two Internationalizations' | LEE Kyung-mi

The year 2023 marks the centenary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However, in Japan, the 'history of concealment' is still dominated by narratives of 'reconstr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assacre' is repeatedly talked about as an absolute concern. The gap between 'what is said' and 'what is not said' is increasingly widening. It has been 60 years since massacre studies began, and its accumulated achievements in Japan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n academia, leading to the discovery of new topics. Nevertheless, its prospect is not so bright because the 'viewpoint on the massacre' has failed to be renewed unlike greater diversification in research topics. In this sense, this paper addresses the 'epistemology' of the massacre problem.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s (the source of the rumor, the character of the victim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massacre studies. This attempt is not only significant in its survey of existing research from a perspective of contested history, but also in its display of potential implications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can have on actual real-world problems.

• **Keywords:** Kanto Earthquake, Massacre, Rumor, Korea-Japan Talks, Kang Deok-sang

The Significance of Kim Dae-jung's Open-Door Policy towards Japanese Pop Culture | NAM Sang-wook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popular culture and Korea's related stances of opening and delay were represented in the discourse of President Kim Dae-jung which represents the governmentality of the state. This is to understand how 'culture' has been rearranged and functioned in Korea since the 1990s within the realm of national governmentality and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Above all, in the discourse of Kim Dae-jung who became president in the midst of the IMF economic crisis, Korea's opening to Japanese popular culture served as a message asking cultural artists to live as human beings in the market without exception under the global market economy system. His discourse, which represents Korea's opening to Japanese popular cultur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ultural industry, contradicted the Japanese expectations for a symmetrical relationship through recipient-centered cultural exchanges, eventually, this contributed to the 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 Kim Dae-jung government delayed the full opening of Japanese pop culture due to textbook issues, indicating that, even in the 21st century, the state still has the power to place certain culture outside its market to maintain its governmentality.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critically consider the Kim administration's intention

- jp/articles/-/17077?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の婚約者 小室圭さんが目指す国際弁護士とは「初年度の年収で一千万円」, <https://www.jprime.jp/articles/-/9796?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 婚約者 小室圭さんが母が借金未返済でも養った“彫金師”恋人の存在」, <https://www.jprime.jp/articles/-/11512?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 ご成婚へ最後の手段!? 「一時金」辞退を」, <https://www.jprime.jp/articles/-/12524?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眞子さまに初ロマンス!? 学習院 ICUでのカレの噂と今回のお相手」, <https://www.jprime.jp/articles/-/8328?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三菱東京UFJ銀行』の元同僚, 職場での小室圭さんに感じた「違和感」を告白」, <https://www.jprime.jp/articles/-/10956?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元プリンセス6人 “普通の主婦”になった現在の私生活が興味深い」, <https://www.jprime.jp/articles/-/9543?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 「6人の未婚プリンセスたち「意中の男性」との今後はどうなる?」, <https://www.jprime.jp/articles/-/9213?display=b>(최종 검색일: 2023. 11. 30.).

〈기타 주간지 기사〉

- 「愛子さまの「結婚の自由」も奪いかねない岸田政権の「保守的な皇位継承」議論」, <https://jisin.jp/koushitsu/2265238/>(최종 검색일: 2023. 11. 30.).
- 「佳子さま 自室が狭すぎて荷物を収納できない…“30億円改修”秋篠宮邸で発覚したまさかの欠陥」, <https://jisin.jp/koushitsu/2207734/>(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小室圭さん裏切りのマンハッタン留学 秋篠宮ご夫妻も愕然」, <https://bunshun.jp/denshiban/articles/b681>(최종 검색일: 2023. 11. 30.).
- 「小室圭さん 眞子さまとの一時金1.5億円減額 辞退の可能性」,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81018_784159.html?DETAIL(최종 검색일 2023. 11. 30.).

연구논단

관동대지진 학살문제의 인식론: ‘불편한 공존’의 균열과 ‘두 가지 국제화’의 행방 | 이경미

〈국문 문헌〉

- 강덕상,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일본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호, 역사비평사, 1999.
- 강효숙,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의미: 민족, 제노사이드」, 『전북사학』 52호, 전북사학회, 2018.
- 김강산, 「제노사이드의 관점으로 본 관동대학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1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 김광렬, 「21세기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와 1923년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법의 논리 고찰」, 『한일민족문제연구』 33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 김도형, 「관동대지진 한국인 피살자 명부 자료의 분석」, 『북악사론』 12호, 북악사학회, 2020.
- 김현수,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재일조선인운동을 중심으로』, 선인, 2016.
- 노주은,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 노주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학림』 29집,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08.
- 다나카 마사타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
-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7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 박정진, 「‘일조협회’의 결성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국제정치논총』 51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 박정진,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일본인의 귀국협력: ‘일조우호운동’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와역사』 91호, 한국사회사학회, 2011.
- 성주현, 「1923년 관동대지진과 국내의 구제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 우카이 사토시, 신지영 옮김, 『주권의 너머에서』, 그린비, 2008.
- 이경미, 「관동대지진 학살문제의 존재론: 방법으로서의 ‘오인’과 가능성으로서의 ‘지인」, 『일본사상』 45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23.
- 이형식, 「중간대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동양사학연구』 113집, 동양사학회, 2010.
- 장세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史林』 46호, 수선사학회, 2013.
- 조경희,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 ‘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8호, 대구사학회, 2017.
- 조관자, 「제국 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 일본 낭만파에 대한 기억」, 『일본비평』 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 허영란, 「강덕상: 민족운동사 연구의 기초를 놓은 재일역사학자」, 『역사비평』 63호, 역사비평사, 2003.
- 홍선표,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歐美 한인세력의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4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일본사학회 주최, 『관동대지진 100년: 민중폭력과 역사적 기억』 자료집, 2023년 8월 18일.
- 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진실·책임·기억』 자료집, 2023년 8월 30일.

〈일문 단행본〉

-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実行委員会 編, 『かくされていた歴史: 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実行委員会, 1974.
-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実行委員会 編, 『歴史の真実: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現代史出版会, 1975.

関東大震災七〇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 編, 『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 日本経済評論社, 1994.

関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 編, 『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アジア・国家・民衆』, 日本経済評論社, 2004.

関東大震災9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 編, 『関東大震災記憶の継承: 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 日本経済評論社, 2014.

関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発掘し返悼する会 編, 『風よ鳳仙花の歌をはこべ: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70年』, 教育史料出版会, 1992.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9・2集会実行委員会 編, 『埼玉県内における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資料』, 1973[1963].

姜徳相, 『新版 関東大震災: 虐殺の記憶』, 青丘文化社, 2003.

姜徳相, 『(新装版)関東大震災』, 新幹社, 2020.

姜徳相・琴秉洞 編, 『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

姜徳相聞き書き刊行委員会, 『時務の研究者 姜徳相: 在日として日本の植民治史を考える』, 三一書房, 2021.

大門正克 編, 『昭和史論争を問う: 歴史を叙述することの可能性』, 日本経済評論社, 2006.

田中正敬・専修大学関東大震災史研究会 編, 『地域に学ぶ関東大震災: 千葉県における朝鮮人虐殺その解明 追悼はいかになされたか』, 日本経済評論社, 2012.

田原洋, 『関東大震災と中国人: 王希天事件を追跡する』, 岩波書店, 2014.

千葉県における関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 調査実行委員会 編,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 関東大震災と朝鮮人』, 青木書店, 1983.

朝鮮大学校朝鮮に関する研究資料編集委員会 編, 『1923年・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 総合企画舎ウイル, 2008[1963].

辻野彌生, 『福田村事件: 関東大震災知られざる悲劇』, 崙書房出版, 2013.

遠山茂樹・今井清一・藤原彰, 『昭和史[新版]』, 岩波書店, 1959.

仁木ふみ子, 『震災下の中国人虐殺』, 青木書店, 1993.

日朝協会豊島支部 編, 『民族の棘: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の記録』, 日朝協会豊島支部, 1973.

朴正鎮,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平凡社, 2012.

藤原彰・松尾尊兌 編, 『論集現代史』, 筑摩書房, 1976.

松尾章一 監修, 平形千恵子・大竹米子 編, 『関東大震災 政府陸海軍関係史料I巻: 政府 厳戒令関係史料』, 日本経済評論社, 2003[1996].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003.

山田昭次 編,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関係史料V: 朝鮮人虐殺関連新聞報道史料1』, 緑蔭書房, 2004.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 国交正常化をめぐる』, クレイン, 2005.

<일문 논문>

今井清一, 「大震災下の諸事件の位置づけ」, 『労働運動史研究』37号, 労働運動史研究会, 1963.

- 江口渙, 「大震災とファシズム××の失敗」, 『戦旗』15号, 戦旗社, 1930.
- 小川博司, 「関東大震災と中国人労働者虐殺事件」, 『歴史評論』281号, 歴史教育者協議会, 1973.
- 加藤卓造, 「日朝協会の記念事業」, 『労働運動史研究』37号, 労働史研究会, 1963.
- 加藤卓造, 「関東大震災の教訓: 日朝協会の調査・研究活動」, 『歴史評論』157号, 歴史科学協議会, 1963.
- 姜徳相, 「関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実態」, 『歴史学研究』278号, 歴史学研究会, 1963.
- 姜徳相, 「大震災下の朝鮮人被害者数の調査」, 『労働運動史研究』37号, 労働運動史研究会, 1963.
- 姜徳相, 「つくりだされた流言: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について』」, 『歴史評論』157号, 歴史科学協議会, 1963.
- 姜徳相, 「関東大震災六〇年に思う」, 『季刊三千里』36号, 三千里社, 1983.
- 姜徳相, 「関東大震災八〇周年を迎えてあらためて考えること」, 『朝鮮史研究会論文集』42集, 朝鮮史研究会, 2004.
- 姜徳相, 「一国史を超えて: 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研究の50年(特集 関東大震災90年 朝鮮人虐殺をめぐる研究-運動の歴史と現在(1))」,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668号,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2014.
- 姜徳相・琴秉洞, 「松尾尊允氏『関東大震災と朝鮮人』書評についての若干の感想」, 『みすず』6巻4号(通巻59号), みすず書房, 1964.
- 小園崇明, 「関東大震災下に虐殺されたる者: 近代日本における音声言語のポリティクス」, 『東京社会福祉史研究』第6号, 東京社会福祉史研究会, 2012.
- 斉藤秀夫, 「関東大震災と朝鮮人さわざ」, 『歴史評論』99号, 歴史科学協議会, 1958.
- 斉藤秀夫, 「関東大震災史研究が問いかけるもの」, 『歴史地理教育』506号, 歴史教育者協議会, 1993.
- 塩田庄兵衛, 「はじめに」, 『労働運動史研究』37号, 労働運動史研究会, 1963.
- 慎蒼宇,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朝鮮人虐殺: 義兵戦争 シベリア戦争 三一独立運動から関東大震災へ」, 『朝鮮大学校学報』29号, 朝鮮大学校, 2019.
- 慎蒼宇, 「軍隊による朝鮮人虐殺: 植民地戦争経験の蓄積という視点から」, 『歴史評論』881号, 歴史科学協議会, 2023.
- 高柳俊男, 「朝鮮人虐殺についての研究と文献」, 『季刊三千里』36号, 三千里社, 1983.
- 西村直登,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る朝鮮人の生と記憶」, 同志社大学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20.
- 羽仁五郎,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40周年を迎えるにあたって」, 『歴史評論』157号, 歴史科学協議会, 1963.
- 朴正鎮, 「北朝鮮と日本革新運動: 日本における日韓会谈反対運動の発生(1960-62年)」, 『翰林日本学』17号,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0.
- 松岡文平, 「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について」, 『ヒストリア』65号, 大阪歴史学会, 1974.
- 松岡文平, 「関東大震災と在日中国人」, 『千里山文学論集』8号, 関西大学, 1975.
- 松尾尊允,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上)」, 『思想』471号, 岩波書店, 1963.
- 松尾尊允,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下)」, 『思想』476号, 岩波書店, 1964.
- 松尾尊允,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暴動流言に関する2, 3の問題」, 『朝鮮研究』33号, 日本朝鮮研究所,

1964.

松尾尊允, 「姜徳相, 琴乘洞『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1963年への書評, 『みすず』6巻2号(通卷57号), みすず書房, 1964.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虐殺事件とこれをめぐる現在の思想現況, 『(季刊)戦争責任研究』90号,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2018.

<인터넷 자료>

沖繩テレビ, 「映画「福田村事件」関東大震災後の虐殺事件を描く, 2023. 9. 28., <https://www.youtube.com/watch?v=uX0LUQDatCE>(최종 검색일: 2023. 12. 26.).

神奈川県立文書館, 「執筆分担一覧, <https://archives.pref.kanagawa.jp/>(최종 검색일: 2023. 12. 2.).

高麗博物館, 「関東大震災100年: 隠蔽された朝鮮人虐殺, <https://kouraihakubutsukan.org/>(최종 검색일: 2023. 12. 5.).

東京都総務局総合防災部防災管理課, 「関東大震災100年, <https://www.bousai.metro.tokyo.lg.jp/>(최종 검색일: 2023. 12. 5.).

東京大学大学院 総合文化研究科 グローバル地域研究機構 韓国学研究中心, 「関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から100年 レイシズムと歴史否定を考える ~国連特別報告者を迎えて, <http://www.cks.c.u-tokyo.ac.jp/index.html>(최종 검색일: 2023. 12. 5.), <https://m.youtube.com/watch?v=1B-dwxw8Ugm8>(최종 검색일: 2012. 12. 5.).

<영문 문헌>

Ryang, Sonia,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Massacre of Koreans in 1923: Notes on Japan's Modern National Sovereignty," *Anthropological Quarterly* 76(4),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stitute for Ethnographic Research, 2003.

김대중의 말을 통해 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 남상욱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90년대편: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1권』, 인물과사상사, 2006.

김대중, 『이경규에서 스피버그까지』, 조선일보사, 1997.

김성민, 『일본을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4.

김학재,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 평화』9집 2호, 2017.

남상욱, 「일본 대중문화와 한국의 통치성: 자기 제한 장치에서 플랫폼 속의 소비재로, 나아가 규제 회피의 회장으로, 『상허학보』제54집, 2018.

남은영, 「1990년대 한국 소비 문화: 소비의식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제76집, 2007.

노명환, 「한류를 위한 김대중의 기여와 미완의 기대중 사상 정책의 완성을 위한 한류의 의미와 역할: 민주주의 평화 상생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세계시민주의를 위하여, 『역사문화연구』제83집, 2022.

류동민, 「김대중의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23호, 2010.

류상영·와다 하루키·이토 나리히코 편,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연세